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6호

2026 봄

17세기 위기: 기근, 전쟁, 반란의 세계

포커스 I 아시아: 위기 속 끈기

포커스 II 유럽: 위기 속 재편

N O R T H E A S T A S I A N H I S T O R Y F O C U S

차례

편집자의 글

4

이주연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6호 기획편집위원

포커스 I

아시아: 위기 속 끈기

17세기 조선의 전쟁,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

10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7세기 기후위기와 명·청 교체:

‘하늘의 시간’과 ‘인간의 대응’

25

조영현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에도시대 기후 변동은 어떠한 사회 변혁을 불러왔나

36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17세기 동남아시아의 글로벌 위기

48

조호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포커스 II

유럽: 위기 속 재편

30년전쟁과 17세기 위기

59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복합 위기 속 러시아: 과거와 현재

71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잉글랜드혁명의 소빙기: 민중과 국가

81

김철기 전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다른 시선

기후위기와 21세기 국제질서의 재편

92

천강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연구위원

체험! 역사현장

비극의 현장에서 화해의 공간으로:

102

조세이탄광을 가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워진 역사와 사람들: 사도광산을 가다

112

함예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차이의 수용과 비교의 조건:

123

타이완의 ‘식민지’ 인식과 현대사

전영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NAHF 톨아보기

지정학적 블록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

138

국제관계연구소 학술회의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첫 발걸음, 그리고 지속될 여정:

148

제 1회 한일 중국사 연구자 초청 국제학술회의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Contents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16	4
	Lee, Ju-yeon	
FOCUS I Asia: Perseverance in Crisis	War, Famine and abnormal Climate in Seventeenth Century Joseon	10
	Jang, Jung-soo	
	The Seventeenth-Century Climate Crisis and the Ming-Qing Transition in China: “Heaven’s Time” and “Human Responses”	25
	Cho, Young-hun	
	Climate Fluctuations and Famine in the Edo Period	36
	Gim, Youngsuk	
	The Global Crisis in 17th-Century Southeast Asia	48
	Jo, Ho-yeon	
FOCUS I Europe: Restructuring in Crisis	The Thirty Years War and the Seventeenth-Century Crisis	59
	Kim, Joon-suk	
	Russia Amid Polycrisis: Past and Present	71
	Lee, Ju-yeon	
	The Little Ice Age in the English Revolution: the People and the State	81
	Kim, Chulki	
Another Perspective	The Climate Crisis and the Reconfiguration of the 21st-Century International Order	92
	Chen Gang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From Tragedy to Reconciliation: A Visit to the Chosei Coal Mine	102
	Nam, Sang-gu	
	Obscured History and People: Visiting the Sado Mines	112
	Ham, Ye-jae	
	Taiwan’s Colonial Perception and Post-colonial History: Accepting Difference and Enabling Comparison	123
	Jeon, Young-wook	
NAHF’s Topical Investigation	The Return of Geopolitical Bloc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38
	Kim, in-hee	
	First Steps and a Continuing Journey: The 1st Korea-Japa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cholars of Chinese History	148
	Wee, Ka-ya	

편집자의 글

21세기는 ‘겹쳐진 위기(Polycrisis)’시대다. 기후위기, 국제질서의 붕괴, 전쟁의 상시화, 민주주의 후퇴, 사회적 신뢰의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처럼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가령 제프리 파커(Geoffrey Parker)가 주장한 것처럼, 17세기 소빙기 기후 변화 속에서 전 세계가 기근, 전쟁, 반란, 국가 재정 위기를 동시에 겪은 ‘총체적 위기(Global Crisis)’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정치적 불안이 연쇄적으로 증폭되며 각 지역의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이번 포커스는 21세기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17세기 총체적 위기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차이와 결과를 낳았는지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아쉽지만, 이번 호에서 21세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번 호의 목적은 위기의 극복 방안 제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합적 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총체적 위기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위기는 그 자체보다도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오늘날의 위기 상황을 성찰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인식을 얻길 기대한다.

「포커스 I」은 ‘아시아: 위기 속 끈기’라는 주제로 17세기 총체적 위기 속 아시아 사례를 소개한다. 아시아 사례에 ‘끈기’라는 표현을 넣은 이유는 사회 혼란과 변동이 큰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전개했고, 이로써 유럽 사례와 달리 종래의 체제를 유지한 채 혼란을 수습해 나갔기 때문이다.

장정수는 17세기 조선의 위기는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이 가장 큰 요소였고, 기근은 부차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

부 세력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고, 당시 조선의 군사제도는 농병일치였으므로 전쟁 상황 속에서 농업생산력이 저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변동으로 인한 기근은 당시 농업에 문제를 가중했을 것이라는 논리도 제시한다.

조영헌은 중국의 명·청 교체 시기, 기후 재난에 대한 두 왕조의 다른 대응 방식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1641년 기후 환경의 변화로 극심한 가뭄, 한랭화, 메뚜기떼, 전염병 등이 발생했고, 명은 기근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청의 순치제와 강희제는 명의 사례를 거울삼아 국가를 통치했는데, 특히 강희제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정책으로 청 왕조의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통치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즉, 혹독한 기후위기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숙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비교적 긴 기간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기근과 사회 변화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에도시대 간에이, 교호, 덴메이, 덴포 연간의 4대 기근으로 나타난 처절한 사회문제를 상세히 다룬다. 특히 저자는 덴포기근 이후 나타난 사회문제를 막부가 개혁정치로 해결하려 했지만,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국적 반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즉, 기근에 따른 사회 변화와 저항이 메이지유신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조호연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파커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글로벌 위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공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지만, 이 지역에서도 기후 변동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대응이 감지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베트남의 사례를 강조한다. 17세기 글로벌 위기로 인한 국제무역 쇠퇴에 큰 영향을 받은 베트남은 대외무역의 비중을 줄이고 내향적 농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한다.

「포커스 II」는 ‘유럽: 위기 속 재편’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한다. ‘재편’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는 아시아와 달리 유럽에서는 국가체제의 변화를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김준석은 유럽 사례로 30년전쟁의 전개, 원인, 의미 등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기존 연구가 30년전쟁 이후 체결된 베스트팔렌평화조약(1648)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정

치체제 및 국제법에 주목하지만, 그는 기후위기와 전쟁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17세기 기후위기는 전쟁을 낳았고, 전쟁은 위기를 부추겼다. 즉, 기후 변동, 농업생산성 감소, 경제위기, 반란, 전쟁 등 다양한 위기가 서로 연동했고, 30년전쟁은 베스트팔렌평화조약 체결로 일단락되면서 신성로마제국 내부 권력 구조와 유럽 국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주연은 러시아의 스무타(동란의 시대)를 중심으로 17세기 러시아의 위기 상황을 조명한다. 그는 당시 기후 변동에 따른 기근, 차르 참칭자(가짜 드미트리)의 등장, 폴란드의 침략 등 국내외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로마노프 왕조가 탄생했고, 이는 러시아식 국가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21세기 현재에도 러시아는 기후위기, 전쟁 등 복합적 문제에 놓여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철기는 17세기 기후 변화, 기근, 반란으로 이어지는 베이컨과 파커의 반란모델을 경계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잉글랜드혁명 시기 빈곤에 따른 민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작성하였다. 그는 혁명의 주요 요인을 찰스 1세의 누이(종교 갈등), 정치적 신념 그리고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내 갈등으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기상 이변으로 흉작과 질병이 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스코틀랜드 반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잉글랜드 사례에서 기후 변화, 수확량 감소, 식량 폭동 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민중의 반란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활용하기 위한 요청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번 포커스에는 「다른 시선」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추가했는데,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첸강(Chen Gang)이 ‘기후위기와 21세기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다. 그는 21세기 글로벌 기후위기 속에서 중국이 환경문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여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호에서 중국의 글로벌 기후정책을 소개한 이유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인류의 삶과 번영뿐만 아니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체험! 역사현장」은 세 편의 글로 구성하였다.

남상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기 피해자 추도식에 참가하여 행사 상황과 함의를 전한다. 그는 추도광장이 2013년 시민들의 기부로 조성한 공간이고, 일본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상 규명과 유족 교류를 매년 진행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조세이탄광이 비극의 현장을 넘어 기억과 교류를 통한 화해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 상황을 전한다.

함예재는 사도광산과 전시 시설을 답사한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사도광산에서 생산된 금은 에도막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에도 사용되었으므로, 관광포스터에서 강조한 ‘금’과 ‘번영’의 이미지는 사도광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시설 설치와 추도식 이행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려는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전영욱은 타이완 타이베이에 방문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의 역사와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가 답사에서 놀란 지점은 한국과 타이완이 식민지 역사를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라 보였다는 것이다. 타이베이에서는 식민지 유산의 극복보다 식민지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와 기억이 더 강조되었고, 그 결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역사가 오히려 타이베이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NAHF 톨아보기」는 재단에서 개최한 두 학술회의를 조명한다.

김인희는 ‘지정학적 블록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가 역사학자와 국제정치학자가 함께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향후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 완충국가의 지정학 전략,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지정학, 문명주의 등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을 피력한다.

위가야는 제1회 한일 중국사 연구자 초청 국제학술회의를 소개한다. 그는 이 학술회의가 한일 양국 연구자들이 직접 마주 앉아 연구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이 학술회의가 꾸준히 열려 한일 학계가 중국사라는 공통 주제를 더 넓은 시야로 함께 연구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17세기 ‘총체적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세계사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모쪼록 21세기 기후위기 속 대한민국 정부와 독자들에게 기후와 국가 발전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은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6호 기획편집위원

이주연

포커스 I

아시아: 위기 속 끈기

17세기 조선의 전쟁,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7세기 기후위기와 명·청 교체: '하늘의 시간'과 '인간의 대응'

조영현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에도시대 기후 변동은 어떠한 사회 변혁을 불러왔나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17세기 동남아시아의 글로벌 위기

조호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7세기 조선의 전쟁,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

장정수(張禎洙, Jang, J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조선후기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7세기를 중심으로 조선의 대외관계를 연구해 왔고, 변경·해양·도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대인들의 정서와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기: 전쟁과 기근, 기후?

16~19세기에 걸쳐 조선의 역사서에는 한재(旱災)와 수재(水災), 그로 인한 기근 관련 기록이 다수 보인다. 이는 한랭한 기후, 즉 이상저온현상이 한동안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그중에서도 17세기의 피해는 더욱 혹심했는데, 이는 유럽의 ‘17세기 위기론’과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조선 역시 전 지구적 이상현상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소빙기(Little Ice Age)’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7세기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일본에는 에도막부가 새로이 들어섰다. 조선은 왕조를 유지했지만,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대규모 전쟁을 치르면서 존립의 위기를 맞았다. 내부적으로도 반정·반란 및 예송·환국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 기근이 잇따르고 전염병이 유행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조선은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군역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며, 진휼 차원에서 비축해 둔 곡식을 방출하는 등 다양한 민생 안정책을 강구했다.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점은 과연 이상기후가 전쟁이나 기근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느냐이다.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농병일치(農兵一致)’의 군사제도를 가진 조선은 충분한 전력을 갖추는 동시에 풍족한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즉, ‘부국(富國)’과 ‘강병(強兵)’은 병립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전시 혹은 그에 준한 상황이 이어지던 17세기 전반의 기근은 ‘경신대기근(庚申大飢饉)’으로 대표되는 17세기 후반의 그것과는 주요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전반 임진왜란·병자호란 전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기에 발생한 기근이 이상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 혹은 그에 준한 상황이 이어지던 17세기 전반의 기근은
'경신대기근'으로 대표되는 17세기 후반의 그것과는
주요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임진왜란: 위기의 조짐과 전쟁·기근

1640년을 즈음하여 중국에 몰아닥친 대기근은 명조의 몰락을 가져온 유력한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¹ 명조의 몰락에 이은 만주족의 입관(入關)과 청조의 중원 지배, 즉 명·청 교체는 조선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위기의 조짐은 이미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15세기는 조선이 안으로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밖으로 야인(野人)과 왜인(倭人)에 대한 강경·유화책을 병행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진 시기로 평가받는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변경에도 불안감이 감돌았다. 왜인과 야인이 조선의 권위에 도전하여 변경을 침략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 규모도 심상치 않았다. 특히 1583년 함경도 육진(六鎭) 지역의 번호(蕃胡)들이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경원(慶源)을 함락한 사건은 심각한 사태였다. 최대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 규모도 문제였지만, 번호가 조선의 권위에 비교적 순응하던 여진 세력임을 고려하면 간단치 않은 상황이었다. 조선은 이후 수년간 이들과 공방전을 지속했는데, 임진왜란 직전 혹은 그 와중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조선은 수세에 몰려 불과 2개월 만에 평양을 일본군에 내주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일본군은 전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조선 8도의 대부분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조선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병의 쫓기와 수군의 활약, 관군의 재정비까지 조선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전력 재건에

1 조영현, 2014, 「'17세기 위기론'과 중국의 사회 변화: 명조 멸망에 대한 지구사적 검토」, 『역사비평』 107.

잔폐한 사정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명의 '은혜'로
간신히 소생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은 명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에는 명의 지원을 얻으려는 외교적 수사였다.

나섰고, 외교적 노력 끝에 명의 인적·물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곳곳에 명과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의 경제적 사정은 악화되었다. 특히 계사년(1593)과 갑오년(1594)에 걸친 '계갑기근(癸甲飢饉)'은 식인 행위마저 보고될 만큼 심각했다.

계갑기근의 원인으로 한랭한 기후나 그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하락도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농업생산량의 하락은 곡물 생산에 투입되어야 할 장정들이 군대에 머물면서 소비자로 전환된 점을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장수들이 어렵게 마련한 병력을 해산시켜 논과 밭으로 돌려보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상기후라는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기근의 주요 원인은 생산 주체의 감소와 소비 주체의 증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증유'라는 표현이 사료에서 산견되지만, 이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줄지언정 이상기후의 증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1595~1596년의 풍작은 이 같은 추정의 방증이다. 이 시기에는 명과 일본의 강화 교섭이 본격화되면서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선은 조총수(鳥銃手)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전법체제를 갖추어 훈련도감, 속오군 등의 군사조직을 마련했는데, 그 병력이 5만여 명을 상회하였다. 그 밖에 남해안 일대에서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던 일부 병력은 유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장정은 경작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같은 작황의 변화는 기후보다 경작 여건의 차이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후부터 17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흉작이 이어졌다. 이는 전쟁과 일본군 철수 이후의 재침 위기에 따른 데서 찾아야 한다. 또 이 무렵 조선이 명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기근'을 강조하는 것 역시 정치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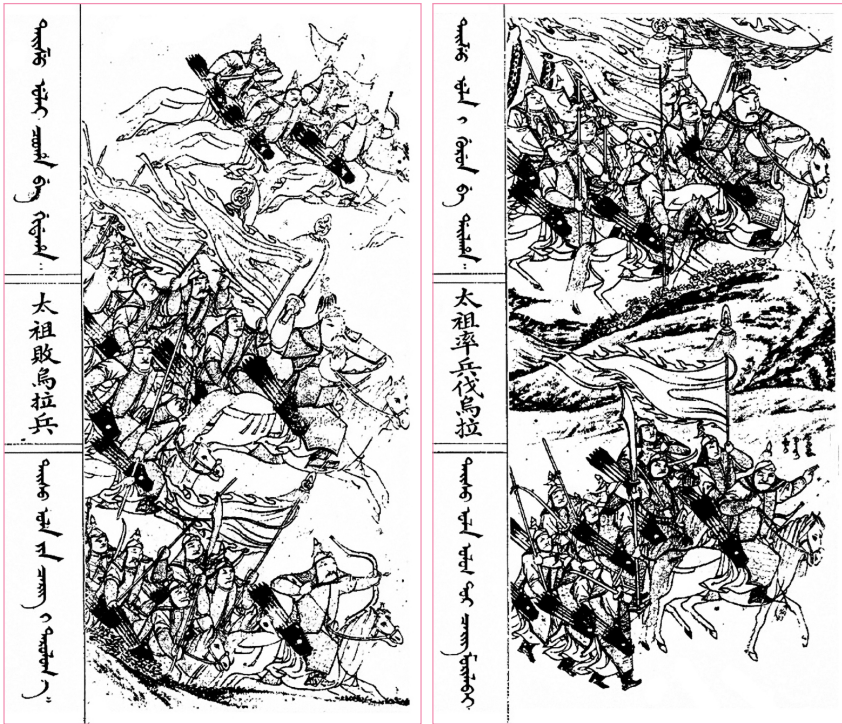
을 달성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잔폐한 사정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명의 ‘은혜’로 간신히 소생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은 명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 시에는 명의 지원을 얻으려는 외교적 수사였다. 이를 두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줄곧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료의 행간을 무시한 일차원적 해석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근을 이상기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으려면 관련 사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근과 절식: 조선의 변경을 찾은 여진인들

한국사 교과서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여진의 흥기’라는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명의 국력이 쇠락한 틈을 타, 여진의 누르하치가 굴기하여 세력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누르하치는 여진 세력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했으며, 사후 청조의 태조(太祖)로 추존되는 인물이다. 얼핏 인과적으로 무리가 없는 서술인 듯하지만, 청조의 성공을 염두에 둔 ‘결과론적 해석’이 없지 않다.

앞서 1583년 여진 변호의 배반과 침입 양상이 전에 비해 한층 더 위력적이었음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1582년 해서여진(海西女眞)의 일파로서 여진 사회를 주름잡던 하다(哈達)부가 힘을 잃으면서 여진의 여러 부족이 각축전을 벌이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여진의 강대한 부족들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만강 유역의 변호들을 포섭 혹은 복속시키고자 했다. 이들이 연계한 결과 16세기 후반 여진의 침입은 이전에 비해 규모가 컸다.

건주여진(建州女眞)의 누르하치 역시 변호를 복속시키기 위해 부신했다. 그는 요동에서 명과의 교역권을 두고 해서여진의 여러 부족과 경쟁하는 한편, 여진 변호의 복속을 두고 홀룬(忽瀾)과 대립했다. 이렇듯 강대한 여진 부족 간의 상쟁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주여진은 백두산 인근의 여진 부족을 석권하여 조선과 접경하게 되었고, 홀룬은 두만강 유역의 변호들을 공략하여 전향시켰다. 하지만 인구의 과도한 유입은 극심한 식량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612년 누르하치의 올라(홀룬) 정벌

출처: 『만주실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7세기 초 ‘만주’ 지역에 들었던 기근은 강대한 몇몇 부족의 영역이 확장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 위력을 배가하였다. 1601년 흉년으로 인해 새롭게 복속시킨 하다부의 인민을 옛 땅으로 되돌려보낸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² 기근으로 인

2 그 밖에 1615년 누르하치가 해서여진의 여허(葉赫)부를 공격하지는 부하들의 제안을 두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획득한 사람과 가족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우리에게는 곡물을 저장할 창고가 없다. … 우리의 원래 백성마저 모두 죽게 된다”라며 거부한 것도 한 예다(『滿文老檔』 태조4, 만력43년 6월). 이처럼 누르하치는 주변의 군소 세력을 병합하면서도 새로 부양해야 할 인구를 처리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고심했다.

한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새로운 인민을 추가로 부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같은 해, 누르하치는 식량난을 해소하는 방편의 하나로 조선에 일부 인민을 보내어 식량을 얻어먹게 했다. 『선조실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당시 서쪽 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오랑캐의 땅은 더욱 심했다. 누르하치가 사람을 보내어 만포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 경내에 흉년이 들어 내년 봄에 살아가기 어려울 듯합니다. 조선은 저축된 것이 많다고 하니 서로 구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³

위 글에 나오는 만포는 본래 조선이 건주여진이나 백두산 일원의 여진 부족과 접촉 창구로 활용한 평안도의 중진(重鎭)이다. 이때 평안도 병마절도사는 누르하치의 이와 같은 요구가 1600년에 이미 시작되어 매일 수백 명의 여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함경도에도 여진인들이 와서 결식하는 실정이었다.

이 사건은 조선 승문원에서 명과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정리한 『이문등록(吏文臚錄)』에 더욱 자세히 보인다. 당시 조선은 누르하치의 식량 요구를 명에 보고했고, 명은 누르하치에게 조선이 아닌 명의 변경으로 오라고 지시했음을 알려왔다. 이때 조선은 식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양심을 품은 누르하치가 복수할 것이라는 우려를 외교문서에 담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선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여진인의 인원수를 규정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적어도 1617년까지도 식량을 지급했다. 후금의 건국(1616) 이후까지 이 같은 식량 지원이 이어졌던 셈이다.

이상에서 조선과 여진의 접경지대에 걸쳐 대규모의 기근이 발생했다는 점, 누르하치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의 지원을 받은 점, 건주여진의 침입을

3 『宣祖實錄』 권42, 선조34년(1601) 10월 정해(23일),
“時, 西方失稔 虜地尤甚. 老酋遣人來言於滿浦曰, 我境年凶如此, 明春難以生活. 聞朝鮮多有蓄積云, 幸相賑救, 云云.”

17세기 초 조선과 만주 지역을 강타한 기근은 흑독했지만,
 식량 수급이 어려웠던 주요 원인은 유력한 부족들의
 부양 인구가 급증한 것이었다.

七年 中國邊上草也不打動一振况又節年忠順慶
 劾勒勞皮 朝廷重恩已深沛次稟報 各院老爺并奉
 道詔委的無有此事愚乞仍差人赴該國宣諭及查條何處仇
 犯槍的實有無我奴兒哈赤死也甘心等語何從祖差通一事
 再回宣諭各弟後供相同今奴首差那勇于肯里等跟隨何
 從祖親自面稟與前無異除將未勇于肯里等宣諭實情散
 回原寨外據此看侍奴首差那勇于肯里等稟稱此江東
 夷為四年盜劫少食用具稟奴首隨具印信手奉令各奔向朝
 鮮借糧度日彼國不從各奔即回原寨既並無云犯槍情由據
 性詞頗忠順犬羊之性似難深究既經委官何從祖宣諭前來
 合便詳示移文都司備咨朝鮮國王諭令該處農民各安生理
 勿懷疑懼仍行接撫備禦李欲稱宣諭奴首務要各遵約束如
 各奔欲糧論令照常赴接順清河寬奠饒陽四慶關口貿易接

請 中國曲為接恤毋得仍為弄弄於該國當接庶不違背
 天朝恤小之仁允見爾等歷年忠順之義倘若陽為允從宣諭陰圖使
 犯朝鮮則該國奏之 朝廷必加處置爾等性之無及遠
 一查忠宣諭妥當作速備由星馳呈報以憑施行蒙准隨督令
 委官原任守備何從祖遵依星夜馳赴撫輿會同備禦李欲稱
 選差素說秉情利辨通事董國堂着赴奴首寨內將 撫洗寬
 解李空說一宣諭去及搜括何從祖呈稱至閏二月二十八日
 抵董國堂進境回探奴首云因駐江住牧東夷缺食向隔江
 住種先年原往來朝鮮國住民借米度命彼云我國王法度甚
 嚴不敢私借與你們你違子可去你頭領家討一粟帖來與我
 國王若有命准借方敢借與你們彼奴兒哈赤亦信從實寫票帖
 二依借糧被後國阻回我家達子畫回各寨託差呈報我
 一字後國何故誣害我於死地况我奴兒哈赤守邊疆一十

1602년 명 요동도사가 조선에 보낸 자문
 출처: 『이문등록』 10책(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미면에 방지하고자 만포진에서 일정 수의 여진인에게 음식을 제공한 점 등이 확인된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후금의 건국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여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근은 이상기후의 징후로 볼 수 있을까. 17세기 초 조선과 만주 지역을 강타한 기근은 흑독했지만, 식량 수급이 어려웠던 주요 원인은 유력한 부족들의 부양 인구가 급증한 것이었다. 조선의 접경지역 여진인들이 식량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추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례적인 기

상에 관한 기사들이 있기에 이상기후의 여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시기의 기근과 여진 문제 역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정묘호란: 기근과 곡물 유통, 그리고 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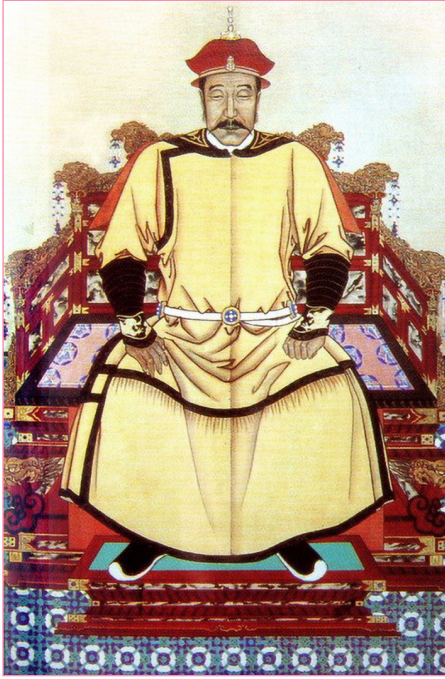
1621년 후금이 요동 지역을 점령한 이후, 명 장수 모문룡(毛文龍)은 조선에 들어와 철산 앞바다의 가도(槓島)를 거점으로 동강진(東江鎭)을 설치하고 인근 해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강진은 조선의 경내에 설치된 명의 군진으로서, 요동의 상실 이후 조선과 명을 잇는 중개지로 기능했다. 후금은 동강진을 제거하여 조선과 명의 연대를 끊고자 전쟁을 일으켰다. 모문룡이 바다로 탈출한 뒤, 후금은 조선으로 주공을 돌렸지만 오래지 않아 화친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조선과 후금은 교섭 끝에 화친하고, 이후 10년간 국교를 이어갔다.

1627년의 정묘호란은 조선이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은 후금의 전신인 건주여진과 꽤 오랜 기간 교섭을 벌여왔으나, 명의 이목을 고려하여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정묘호란 이후의 국교는 여진의 여러 부족을 상대로 전개해 온 정책을 외교정책으로 격상, 전환한 결과였다. 국교에는 교역이나 세폐·예단을 통해서 경제적인 교류도 이루어졌는데, 제한적으로나마 곡식도 그 대상이었다.

이 무렵, 조선 역시 기근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1626년에 시작하여 1629년까지 지속된 ‘병정대기근(丙丁大飢饉)’ 당시, 명과 후금에도 기근이 흑심하여 조선과의 곡물 교역이 지속되었다. 후금의 조선 공격이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⁴ 실제로 후금은 전쟁포로의 속환(贖還)과 개시(開市)를 통해서 식량난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⁵

4 김중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5 김문기, 2012,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누르하치(왼쪽)와 홍타이지(오른쪽)의 초상화
출처: 선양고궁박물관

하지만 정묘호란은 누르하치에 비해 강경한 대조선 정책을 고수한 홍타이지의 성향과 1626년 영원성(寧遠城)에서의 패전 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발발한 전쟁이다. 교역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후금이 조선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식량도 제한되었다. 조선도 후금에 공여 내지 판매할 충분한 곡식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속환이나 개시 역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함경도 지역의 개시는 병자호란 후에야 제대로 운영되었다.

정묘호란부터 병자호란까지 10년은 유독 식량난이 자주 거론되는 기간이다. 사료상 기근이나 흉작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상기후의 징후로 여길 만한 기사도 꽤 있다. 하지만 병정대기근은 물론 이 시기의 기근·흉작 그리고 그에 따른 식량난의 주요 원인을 이상저온현상으로 간주할 만한 증거로는 충분

선조 대부터 인조 대까지의 기근과 굶주림은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이 분명하지만, 이상기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 않다. 10년 동안에도 명·후금 간에는 전쟁이 지속되었고, 조선 역시 전시에 준하여 방수군(防戍軍)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수군은 ‘추방(秋防)’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추방은 강이 얼어붙으면서 북방 민족의 주요 전력인 기병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가을부터 방비 태세를 강화하는 행위를 이른다. 추위에 대한 기록은 특히 강의 양쪽 편이 모두 얼어붙는 합빙(合氷)에 편중되는데, 합빙기에는 강이 육지처럼 개통되어 천혜의 방어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추가로 병력을 확보해야만 방어가 가능했고, 이를 위해 방수군을 동원한 것이다.

방수군의 동원은 1605년 여진 부족 홀룬이 동관진(潼關鎭)을 함락한 사건으로 인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조선은 이때부터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의 군사를 방수군으로 징발하여 6개월~1년 간격으로 교대하게 했는데, 각기 규모가 1만여 명에 달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발생한 뒤로 그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병자호란 직전까지도 수천 명이 가을마다 동원되어 북방의 주요 군사거점에 투입되었다. 조선으로서는 심대한 인적·물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료는 추방에 투입된 군사들이 느낀 추위나 이를 위한 조정 차원의 대책 논의, 강의 결빙 상태로 인한 방수군 투입 시기 조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추방과 관련한 기록 역시 이상기후의 증거는 아니다. 합빙은 16세기 이전에도 있었고, 추방 역시 그러했다. 17세기 전반 기록의 양상은 군사적으로 긴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굶주림, 추위에 대한 언급 역시 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사료상 더욱 자주 거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어도 선조 대부터 인조 대까지의 기근과 굶주림은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이 분명하지만, 이상기후

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병자호란: 예상보다 짧았던 결빙

일반적으로 병자호란 이전 시기를 이상기후 차원에서 이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겨울 추위를 강조하고, 또 기근과 연관시켜 언급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대표적으로 병자호란 당시 청군 전봉군(前鋒軍)의 신속한 진격을 강의 결빙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음력 12월, 양력 1~2월 변경에서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5개의 주요 강⁶이 얼어붙는 상황이 과연 ‘이례적’이었을까.

먼저 따져야 할 문제는 청의 전봉군 300명이 압록강을 건너 6일 만에 도성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다. 당시 청의 장수 마푸타(Mafuta, 馬福塔)가 거느린 전봉군 300명은 상인으로 위장하고 조선에 들어왔다. 이는 『청태종실록(淸太宗實錄)』, 『만문노당(滿文老檔)』, 『청사고(淸史稿)』에 이르기까지 당시 청 사료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나만갑(羅萬甲)의 『병자록(丙子錄)』에도 보인다. 청의 전봉군은, 전시의 선봉대가 아닌 평시의 상인단으로 위장해서 조선군의 경계를 늦추어 손쉽게 도강한 것이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사신단이 왕래하면서 상인단의 규모 역시 수백 명에 달한 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이하 변방 관원과 장수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음에도 상인단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⁷ 즉, 강의 결빙으로 인해 기병으로 구성된 청의 선봉대가 신속하게 남하했다는 등의 서술은 사료에 대한 오해석과 통설적 선입견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청태종실록』에 의하면 홍타이지가 직접 이끈 우익군(右翼軍)의 진격 당시 오히려 강이 녹아 곤란을 겪었던 흔적이 보인다. 우익군이 도착하기 전에 날씨가

6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한강을 이른다.

7 장정수, 2020,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남한산성 서문

출처: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푸근해지면서 임진강의 얼음이 녹았으나, 음력 12월 24일에 비가 오면서 추워지더니 홍타이지가 도착하자 얼음이 견고해져서 말을 타고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만문노당』에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며, 『청사고』에는 도성(國都)의 북쪽 100여 리에 강으로 임진강을 소개하면서 이 사실을 거듭 기록했다. 가장 추운 음력 12월에도 강이 늘 얼어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군이 회군할 때는 이미 강물이 모두 녹아서 조선이 강을 건널 때 쓸 배를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다.

정묘호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음력 1627년 2월 7일 『인조실록』에는 임진강이 녹아서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은 평안도를 석권한 뒤 평양에 본거지를 차렸고, 임진강을 주요 방어선으로 삼은 조선군과 대치했다. 황해도가 일종의 완충지대로 존재한 상

기록이 주는 ‘느낌’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17세기 전반 한반도의 이상기후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황에서 양국의 강화 교섭이 진행되었다. 후금군은 조선의 핵심 방어선이 형성된 임진강을 끝내 넘지 못했는데, 이는 임진강이 얼어붙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두 전쟁에서 후금·청의 출병 일자 차이도 유의미한 사실을 전한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출병은 12월 2일에 시작되었고, 8일야야 전봉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이 1월 13일에 압록강을 건넌 것과 비교하면 1개월 이상 이른다. 이 같은 일자상의 차이는 작전의 목적과 종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음력 1월에 작전을 개시할 경우 후금·청으로서는 강의 결빙 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청은 종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출병 때는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다. 시기를 앞당길 경우, 청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천연두의 발발·확산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⁸

이상에서 본 것처럼 병자호란 시기 조선의 추위는 ‘이상기후’로 파악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추위를 강조하는 경우는 대개 단편적 기록과 인상에 의존한다. 집을 떠나 산성에 갇힌 국왕과 백성들이 겪은 고초를 기록한 것이지 ‘이례적 추위’의 증거는 아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로는 추위를 승패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 어렵다. 청이 승리했다는 결과론적 해석에서 벗어나면, 청군 역시 혹독한 추위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록이 주는 ‘느낌’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17세기 전반 한반도의 이상기후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근은 전쟁의 여파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상기후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8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17세기 조선의 위기

17세기 전반 조선이 겪었던 위기는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참혹한 전쟁과 극심한 기근이 지속되어 정국이 요동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었지만 그 안에서 이상기후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기후와 관련된 사료를 발췌하여 열거하고, 이를 기근 관련 기사와 한데 엮어 분석할 경우 이상기후로 느껴질 수는 있다. 기근의 주요 원인은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라는 점, 전시 혹은 그에 준한 상황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된 데서 찾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17세기 조선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굵직한 전쟁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동이 거듭해서 일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기근을 유발하거나 그 피해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렵게 했다. 반면, 17세기 후반은 앞 시기의 정치적인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시기였다. 내부적으로 정치세력의 변동이나 사회경제적 혼란이 계속되었으나, 대외관계는 일단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경신 대기근으로 잘 알려진 현종~숙종 대에 걸친 기근과 전염병 유행은 이상기후의 징후로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17세기 전반 역시 이상기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이 ‘위기’의 가장 큰 요소였으며, 기근은 오히려 부차적이었다. 전쟁은 흉작과 재정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고, 이는 기근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 17세기 조선은 분명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만, 그 안에서 기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포커스 I

17세기 기후위기와 명·청 교체 ‘하늘의 시간’과 ‘인간의 대응’

조영헌(曹永憲, Cho, Young-hun)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방문학자와 하버드-옌칭연구소의 방문연구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대운하 시대 1415-1784: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포항 운하, 바닷길과 땅길을 잇다』 등이 있고, 역서로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중국은 대국인가: 중국과 세계의 800년 역사』(공역) 등이 있다.



얼어붙은 지구, 17세기 위기의 서막

17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시기였다. 유럽에서는 30년전쟁과 영국의 잉글랜드내전(청교도혁명)이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명과 청이 교체되는 거대한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모순에서 찾았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소빙기(Little Ice Age)’라고 불리는 지구적인 기후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21세기 현재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것과 정반대로, 17세기는 지난 2000년 가운데 가장 혹독하게 추웠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추위는 단순한 기온 하강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였다. 1654년과 1655년 겨울, 중국의 아열대지역인 강남의 타이후(太湖)와 황푸강(黃浦江)이 꽁꽁 얼어붙었고 감귤나무들이 동사했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영국의 템스강이 얼어붙어 그 위에서 장작을 태고 시장이 열렸으며, 조선에서는 17세기 극



템스강의 빙상축제(Abraham hondius, 1684)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Frost-Fair-on-the-Thames-at-Temple-Stairs-168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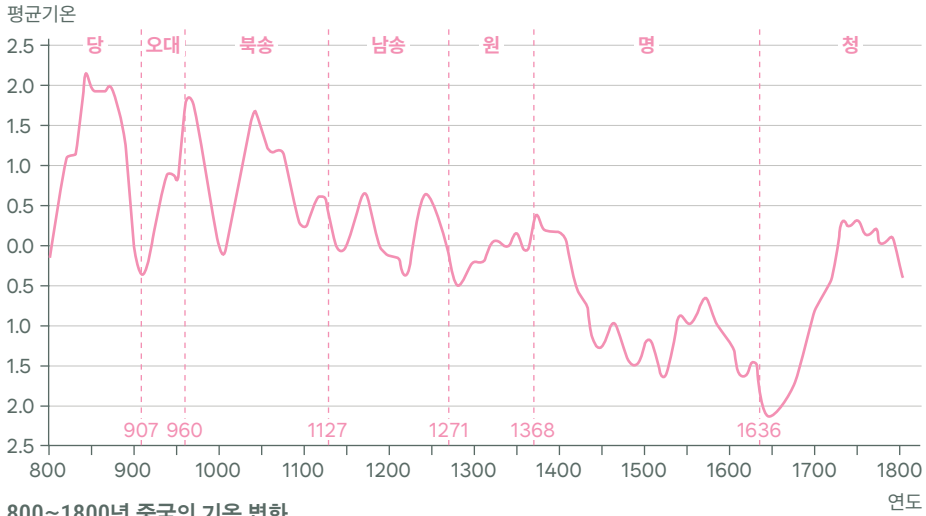
**명 말기인 1600년부터 1643년은
 오늘날보다 평균기온이 1.5~2도가량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반구 온대지역에서 작물성장기에 기온이 2도 하락하면
 쌀 수확량은 30~50%나 감소되고 곡물 경작의 한계고도는 약 400미터가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기후 변화는 농업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심한 흑한으로 보리와 밀이 얼어죽거나 동해가 결빙되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다. 오랫동안 ‘17세기 위기론’의 지구적 현상에 천착했던 제프리 파커(Geoffrey Parker)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전 지구적 기후 변동이 동시다발적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17세기 명·청 교체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동시적으로 국가체제의 붕괴가 있었음을 ‘지구적 위기(Global Crisis)’로 강조했다.

중국의 기후학자 주커전(竺可楨)과 류자오민(劉昭民) 등의 연구에 따르면, 명·청 시기의 소빙기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길게 이어졌는데, 그중에서도 17세기는 가장 한랭했던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명 말기인 1600년부터 1643년은 오늘날보다 평균기온이 1.5~2도가량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반구 온대지역에서 작물성장기에 기온이 2도 하락하면 쌀 수확량은 30~50%나 감소되고 곡물 경작의 한계고도는 약 400미터가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기후 변화는 농업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17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시(天時: 기후), 지리(地利: 농업과 환경), 인화(人和: 정치와 사회적 대응)라는 세 요소가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기후 변화는 천시, 즉 하늘의 시간에 해당하고, 인화는 인간의 대응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명조의 멸망과 청조의 등장은 바로 이



출처: 조영헌 외, 2025, 『중국사를 꿰뚫는 질문 25: 제국의 문화, 열림과 닫힘』, 아르테(일부 수정)

소빙기라는 거대한 자연의 도전(하늘의 시간) 앞에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숭정14년의 기황, 제국의 운명을 가르다

17세기 소빙기의 재앙이 명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인 시점은 바로 숭정(崇禎) 연간(1628~1644), 그중에서도 1640~1642년까지 3년이었다. 당시 강남의 지식인들은 이 시기의 참상을 전대미문의 기이한 흉년이라는 뜻에서 ‘기황(奇荒)’이라 불렀다. 그 가운데 1641년이 가장 심각했기에, 이른바 ‘숭정14년의 기황’이라 부른다.

이 시기는 기후학적으로도 지난 600년 중 가장 춥고 건조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1641년은 1601년, 1816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여름이 추웠던 해로 기록되는데, 이는 필리핀의 파커(Parker)화산 폭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지방지에는 1641년 봄에 검은 안개와 흄비가 내려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기록

이 남아 있어 화산재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1637~1641년까지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5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지난 500년 사이 유일한 사례였다. 그 결과 1641년 7월 조운의 대동맥인 대운하가 산둥성 린칭(臨淸) 부근에서 말라버릴 정도였다. 대운하에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로 곡물을 운송하는 조운선의 왕래가 중단되어 베이징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린칭 지역은 해발고도가 30미터 정도이므로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수량 공급이 어려워지는 지역이었다.

극심한 가뭄과 한랭화는 곧장 농업 생산의 붕괴로 이어졌다. 메뚜기떼(황충)가 창궐하여 남은 농작물마저 휩쓸어버렸다. 엄청난 데 덮친 격으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다. 가뭄과 기근의 여파로 발생한 전염병은 산시(山西), 산시(陝西), 몽골 지역 등 서북지역의 인구를 급감시켰고, 1642년 잠시 멈춘 듯한 전염병은 1643년부터 다시 창궐했다. 그러자 기존에 남쪽으로부터 경제물자를 베이징으로 운송하던 대운하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염병을 옮기는 ‘고속도로’가 되었다. 식량 부족이 극에 달하자 화북지역에서 시작된 ‘식인(食人)’ 풍조가 강남지역까지 확산되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서 즐비했고,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팔거나 잡아먹는 참혹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는 곧바로 정치적 위기로 비화되었다. 1630년대 후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자성(李自成) 등의 농민반란군은 1640년대 초반의 대기근을 계기로 급격히 세력을 확장했다. 굶주린 농민들에게 반란은 생존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고, 명 조정은 이들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숭정제는 “기근을 구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신료들의 경고를 들었지만, 재정은 고갈되었고 행정력은 마비된 상태였다. 굶주린 농민들이 대거 반란군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1644년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에 입성하고 숭정제가 자결함으로써 명은 멸망했다. 이는 소빙기의 기후위기가 사회적 임계점을 넘어 제국의 붕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분명 명조의 몰락 과정에는 기후 변동 외에 다양한 서사 구조가 담겨 있다. 기



물이 말라서 황폐해진 대운하 린칭 구간

출처: 필자 촬영, 2004. 2



새로 정비된 대운하 린칭 구간

출처: 필자 촬영, 2007. 1

명조의 멸망을 단순히 기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칫 '기후결정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전 지구적 위기의 강도를
측정해 보는 것 자체가 역사해석에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서로 같지 않음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존에 늘 언급되던 황제의 무능력과 환관의 발호, 동북 변경에서 세력을 키운 후금(만주족)의 팽창, 왕조 말기마다 반복되는 농민봉기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동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다. 가령 1641년 이자성의 군대가 황하 유역을 장악했지만, 그 직전 전염병으로 인해 이 지역 인구의 70퍼센트가 소멸되고 무방비 상태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자성의 점령이 가능했을까? 명 후기 기후 변화와 연동된 물가의 폭락 현상에 주목했던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은 “이러한 역사의 굵직한 사건을 설명해주는 요소가 오직 날씨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날씨로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¹고 지적했다. 이제 명조의 몰락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해석 리스트 가운데 기후 변동이라는 전 지구적 현상을 추가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위기 속의 대응, 명의 실패와 청의 성공

물론 명조의 멸망을 단순히 기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칫 '기후결정론(climate determin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전 지구적 위기의 강도를 측정해 보는 것 자체가 역사해석에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서로 같지 않음

1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현 옮김, 2014,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116쪽.

政: 정사를 게을리함)과 재정 악화로 인해 조정은 재해 보고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강남의 신사(紳士)와 지식인이 나섰다. 진계유(陳繼儒), 기표가(祁彪佳) 등은 사재를 털거나 지역 유력자들을 모아 구황 활동을 벌였고, 다양한 구황론을 저술하여 자구책을 모색했다. 17세기 전반에 유독 많은 구황서가 출간된 사실은 역설적으로 명조의 무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적인 대기근과 반란의 물결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명 조정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가파(加派)’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며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반면 청은 달랐다. 청 초의 순치제와 강희제는 명의 멸망을 거울삼아 재해 대응을 국가 통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강희제는 1670~1672년 연이은 재해 이후에도 1673년(강희 12)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蠲免)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통해 이전까지 청조의 황정(荒政)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하던 강남의 한족 지식인들이 이민족인 만주족의 청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희제는 묵은 체납 세금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조치를 자주 단행하여 민생을 안정시켰다. 18세기 접어들어 건륭제의 치세에는 청조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농서와 황정서의 출간이 붐을 이루는데, 이는 명 후기 조정이 황정의 주도권을 잃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청조의 적극적인 황정은 정치적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명 멸망 후 청조를 오랑캐로 여기며 반감을 품었던 강남의 한족 지식인들은 강희제의 선정과 구휼정책을 보며 점차 청조를 중화의 정통왕조로 인정하게 되었다. 어떤 지식인은 강희제의 치세를 한의 문경지치(文景之治: 문제와 경제의 치세)에 비유하기도 했다. 17세기 후반에도 기근과 흉작은 계속되었지만, 명 말과 같은 ‘식인’이나 대규모 농민반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청조의 효율적인 국가 대응과 관련이 깊다.

유럽에서도 1690~1700년에 이상기후는 더 극심해졌으나, 혁명이나 반란은 17세기 중엽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소빙기는 계속되었으나 일반적 위기(general crisis)는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위기를 통해 급감했던 인구, 상대적인 이주의 원활함, 전쟁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이전의 위기를 교훈 삼아 민생문제에

명의 멸망은 단순히 환관의 발호나 황제의 무능,
혹은 만주족의 군사적 강성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은 유입의 감소와 더불어 소빙기라는 전 지구적 기후재난이
명의 취약한 구조를 타격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되어 붕괴를 가속화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집권자들의 의지 등이 오히려 더 열악한 기후 환경에서 힘을 발휘했다. 인간의 빠른 적응능력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사적 관점에서 본 17세기 명·청 교체

17세기 기후위기는 동아시아 삼국에 동시에 닥친 시련이었다. 명이 무너지고 청이 들어서던 그 시기, 일본에서는 간에이(寬永)대기근(1641~1643)이 발생했고, 조선에서는 경신(庚辛)대기근(1670~1671)과 을병(乙丙)대기근(1695~1699)으로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조선의 현종은 동해가 얼어붙는 전대미문의 추위 속에서 재해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이러한 지구사적 관점은 명·청 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해 준다. 명의 멸망은 단순히 환관의 발호나 황제의 무능, 혹은 만주족의 군사적 강성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은 유입의 감소와 더불어 소빙기라는 전 지구적 기후재난이 명의 취약한 구조를 타격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되어 붕괴를 가속화했다. 윌리엄 에트웰(William Atwell)과 같은 학자들은 화산 폭발과 기후 변동, 그리고 은 유통의 변화가 맞물려 명 말의 위기를 증폭시켰음을 강조한다. 당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징후로 기온, 강우, 계절풍의 패턴이 바뀌는 상황에서 만주족이 성장한 것 역시 이전 시대 여진 및 몽골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생태적인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역사는 기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더 혹

17세기 명·청 교체는 ‘천시’인 기후재난과
이에 대응하는 ‘인화’인 국가와 인간의 노력이 60여 년에 걸쳐
복합적으로 축적된 결과물, 즉 ‘시간의 집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청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장기 지속의 기틀을 마련했다. 강희37년(1698), 청이 기근에 빠진 조선에 쌀 3만 석을 보내 구휼한 사건은 청조가 소비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17세기의 소비기는 중국사에서 명·청 교체라는 거대한 전환의 무대를 제공했다. 그 무대 위에서 명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혼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청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통성을 확보했다. 따라서 17세기 명·청 교체는 ‘천시’인 기후재난과 이에 대응하는 ‘인화’인 국가와 인간의 노력이 60여 년에 걸쳐 복합적으로 축적된 결과물, 즉 ‘시간의 집적(sediments of time)’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도 자연의 도전과 인간 응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역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에도시대 기후 변동은 어떠한 사회 변혁을 불러왔나

김영숙(金英淑, Gim, Youngsuk)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도쿄대학 일본사학과에서 1930년대 일본 외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의 외교정책, 식민지정책, 만주 지배 등이며, 최근에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에 관해서도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주요 저작으로는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하라 다카시-평민 재상의 빛과 그림자』, 『대동아공영권의 허상과 모순-『사진주보』로 보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등이 있다.



전 지구적 소빙기와 일본

과거 천 년 동안의 지구 온도 변화로 보아 낮은 기온이 지속되었던 14~19세기를 소빙기(小氷期)라고 부른다. 그런데 소빙기의 시기 구분은 기후학자들의 분류 방법과 각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부분의 빙하학자들이 소빙기로 보는 1300~1850년은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시대, 명·청시대,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와 에도막부(江戸幕府) 시기에 해당하며,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아시아 몬순 주기의 변화,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났던 17세기로 국한하기도 한다. 서유럽에서는 30년전쟁, 영국혁명, 스페인제국과 포르투갈제국의 몰락 등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시기였다. 동아시아에서는 1633~1634년의 황하 결빙으로 농민반란이 사방으로 확대되어 명이 멸망에 이르르게 되었고, 매서운 추위로 임진강이 얼어붙어서 강을 쉽게 통과한 청 병사들은 단 5일 만에 한양을 위협할 수 있었다. 특히 소빙기의 한랭한 기온과 잦은 비는 농작물의 생장을 지연시켜서 명 말 1640년대의 대기근, 조선 현종 대와 숙종 대의 대기근을 초래했다. 일본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많은 기근이 발생했다.

에도시대의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각 번의 일기와 막부의 기록, 개인의 저작 등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 기후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당시의 기후를 분석하는, 이른바 ‘기후 복원’에 관한 연구가 역사학뿐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 복원의 방법은 첫째, 특정 장소에서 장기간 측정된 기후 기록을 통해 강우량을 구하고, 300년간 어떻게 기후가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 둘째, 특정한 연대를 대상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측정된 기후를 기초로 기후분포도를 작성해서 기압 배치나 전선 위치 등을 복원하고 현재와 비교·분석해서 정량적으로 기상 변동을 추측하는 방법이 있다.

그 결과 밝혀낸 에도시대 전반에 걸친 기후 변화는 표1과 같다. 표1을 통해서 에도시대는 전반적으로 한랭한 소빙기였지만, 17세기 후반에는 토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기상 조건을 갖춘 소간빙기가 있었다는 점, 제2소빙기 후에 잠깐 동안의 온난한 기후 시기를 거쳐 다시 소빙기에 들어갔다는

표1 에도시대 소빙기와 기후 변화

구분	시기	기후 변화
제1소빙기 [겐나(元和)·간에이(寛永) 소빙기]	1610~1650	매우 한랭
제1소간빙기	1650~1690	온난
제2소빙기 [겐로쿠(元祿)·호에이(宝永) 소빙기]	1690~1720	매우 한랭
	1720~1740	한랭
제2 소간빙기	1740~1780	온난
제3소빙기 [간세이(寛政)·덴포(天保) 소빙기]	1780~1820	한랭
	1820~1850	매우 한랭
	1850~1880	한랭

출처: 마에지마 이쿠오(前島郁雄), 1985, 「歴史時代の気候復元-特に小氷期の気候について-」, 『地学雑誌』 93(7)을 참고하여 작성

표2 에도시대 소빙기 연호와 서기 연도

연호	서기
게이초(慶長)	1596~1615
겐나(元和)	1615~1624
간에이(寛永)	1624~1645
겐로쿠(元祿)	1688~1704
호에이(宝永)	1704~1711
교호(享保)	1716~1736
호레키(寶曆)	1751~1764
덴메이(天明)	1781~1789
덴포(天保)	1831~1845
안세이(安政)	1855~1860

도호쿠 지방 동해안과 간토 지방에서는 5~9월에 걸쳐
 차고 습한 동풍 또는 북동풍이 불어서 기온이 한랭하며, 서일본은 강우량이
 적어서 한발이 잦았다. 역사적으로 동일본 지방은 저온과 잦은 비에
 의해서 냉해형 흉작이 자주 발생했으며, 서일본 지방은
 가뭄에 의한 농작물 생산 저하가 많았다.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후를 지배하는 것은 여름철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겨울철의 시베리아 고기압의 변동인데, 여름철은 1730~1750년대, 1780년대, 1830~1840년대가 저온 기간으로 추정되며, 겨울철은 1680~1690년대, 1730년대, 1810년대가 저온 기간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되도록 서기로 연대를 표기하고자 하지만, 에도시대의 대화재나 지진, 기근 등은 당시 연호로 불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연호를 표2와 같이 정리해 둔다.

일본형 이상기후의 특징

일본을 크게 둘로 구분할 경우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나눈다. 일본 지형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길게 누워 있는 형상인데, 그 중간에 산이 많고 지세가 험해서 ‘일본 알프스’라 불리는 고산지대가 있다. 이 고산지대가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면서 양쪽은 기후나 언어,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경계선을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關東) 지방이 동일본에 해당하고, 긴키(近畿), 간사이(關西), 규슈(九州) 지방이 서일본에 해당한다.

도호쿠 지방 동해안과 간토 지방에서는 5~9월에 걸쳐 차고 습한 동풍 또는 북동풍이 불어서 기온이 한랭하며, 서일본은 강우량이 적어서 한발이 잦았다. 역사적으로 동일본 지방은 저온과 잦은 비에 의해서 냉해형 흉작이 자주 발생했으



1855년(안세이 2년) 에도대지진 화재(安政二年江戸大地震火事場の圖, 江戸大地震之繪圖)

출처: <https://lab.ndl.go.jp/dl/book/1302061?page=1>

며, 서일본 지방은 가뭄에 의한 농작물 생장 저하가 많았다.

한편, 일본은 화산지형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분화가 자주 일어났다. 지진의 경우 지진 자체보다는 오히려 쓰나미(津波), 산사태, 지진 후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 에도시대에 1만 명 이상 사상자를 낸 지진은 많지 않았는데, 1703년과 1707년 지진은 집이 무너지거나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2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1771년 야에야마(八重山), 미야코(宮古) 지진과 1847년 쯤코지(善光寺) 지진도 1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그리고 안세이(安政) 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 1855년에 발생한 에도지진의 사망자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는 많은 화산이 있는데, 에도시대에 분화한 화산은 현재에도 분화하고 있는 아사마야마(淺間山), 후지산(富士山), 운젠 후겐다케(雲仙普賢岳), 아소산(阿蘇

에도시대의 가장 큰 분화는 1792년 운젠 후겐다케 화산 폭발이었다. 1791년 11월부터 일어난 지진의 영향으로 2월부터 분화가 시작되어 5월에는 산사태와 쓰나미를 일으켰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유사 이래 최악의 화산 재해로 기록되었다.



아사마야마 덴메이대분화(淺間山天明大噴火 夜分大焼之圖)

출처: <https://ja.wikibooks.org/wiki/天明大噴火>

산), 사쿠라지마(櫻島) 등 활화산이다. 화산이 분화할 때 흘러나오는 용암류(lava flow)는 지형을 따라 계곡이나 저지대로 흘러서 도로와 농지, 가옥 등을 파괴하며, 암석이나 화산탄, 화산재 등이 파편으로 분출되는 화산쇄설류(volcanic debris flow)는 용암과 같이 계곡과 저지대를 따라 수백 km를 흘러간다. 화산 분화는 하천의 물을 오염시키고 홍수를 유발하며 지진을 발생하게 한다.

아사마야마는 1721년과 1754년 등 여러 차례 분화했는데, 특히 1783년 분화

는 운젠 후젠다케 분화에 버금가는 인적 피해를 입혔다. 에도시대의 가장 큰 분화는 1792년 운젠 후젠다케 화산 폭발이었다. 1791년 11월부터 일어난 지진의 영향으로 2월부터 분화가 시작되어 5월에는 산사태와 쓰나미를 일으켰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유사 이래 최악의 화산 재해로 기록되었다. 화산 폭발로 용암이나 화산재가 덮인 농지는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후지산이나 아사마야마 피해는 막부가 비용을 부담했다.

17세기 일본의 소빙기와 기근

소빙기에는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는데, 일본 근세에 전국적인 피해를 준 간에이, 교호, 덴메이, 덴포 연간의 기근을 4대 기근으로 꼽는다. 기근은 벼농사의 북방한계선인 도호쿠 지방에서 더욱 자주 발생했는데, 이 지방의 피해를 중심으로 고찰할 경우 호레키, 겐로쿠, 덴메이, 덴포 연간의 기근을 4대 기근으로 본다.

에도시대 초기인 간에이(1624~1644) 연간의 기근은 전국적인 이상기후 때문에 발생했다. 1641년과 그 이듬해에 서일본에서는 가뭄이 지속되어 병충해가 발생했으며, 동일본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찬 바람이 불며 지역에 따라서는 8월에 서리가 내리는 등 서일본과는 다른 형태의 이상기후로 흉작이 이어졌다.

겐로쿠(1688~1704) 연간에는 도후쿠 지방에서 아사자와 역병에 의한 사망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대기근이 발생했다. 도호쿠 지방은 제1소간빙기의 온화한 기후에 힘입어 17세기 후반에 대규모 토지 개발을 통해 농지를 확장했다. 그런데 1695년 정월부터 내린 눈에 한기가 덮쳤고 봄에는 벼의 생장이 나빠서 모내기가 늦어졌다. 6월 들어 잠깐 날씨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랭한 기후가 계속되어 솜을 넣은 옷을 입을 만큼 추웠고, 7월 상순에는 동풍과 더불어 연일 비가 내렸다. 이 때문에 벼가 켈 시기에 벼꽃을 손상시켰고, 8월에는 서리도 내렸다. 도호쿠 지방은 1674년 흉작으로 아사자를 낼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지만 그 후 심각한 흉작은 없었는데, 1695년과 이듬해에 걸쳐 7만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여 전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희생되었다. 더욱이 해를 넘기면

서 피해가 심각해진 이유는 눈이 많이 쌓여서 풀뿌리와 나뭇을 채집하기 어려웠고, 거센 파도로 배가 입항하지 못해 쌀값이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유민이 발생하여 도둑질이 횡행하고 치안이 불안했으며, 죽은 부모의 고기를 살아남은 아이가 먹었다는 등, 형제를 죽여서 그 인육을 먹은 사람이 있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18세기 기후의 특징과 소빙기

교호(1716~1736) 연간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후쿠오카번(福岡藩)에서만도 1720년 홍수와 1724년 풍수해, 1726년 한발, 1729년 한발과 홍수가 발생했으며, 1731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저온현상으로 보리농사 수확이 좋지 않았고 역병이 돌아 소가 많이 죽었다. 동일본에서는 농경에 말을 사용하고 서일본에서는 주로 소를 이용했으므로, 역병으로 인해 소가 한꺼번에 죽어나간 것은 농경에도 큰 자질을 빚었다. 피해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간에이 기근을 별도로 하면, 서일본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황해(蝗害)로 인한 1732년 기근이었다. 황(蝗)은 메뚜기를 가리키기보다는 벼에 생기는 병충해를 총칭하는데, 특히 벼멸구 피해가 컸다. 벼멸구는 추위에 약해서 일본에서는 월동할 수 없는 곤충이었지만, 매년 장마철에 계절풍을 타고 중국 남부 등에서 날아와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거나 폭염이 길어지면 더욱 기승을 부렸다. 막부에 보고된 아사자 수는 1만 2,172명이었다.

1755년의 흉작이 발단이 되어 그 이듬해에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호레키(1751~1764) 연간의 기근은 덴메이, 덴포 기근의 피해와 맞먹을 정도로 근세 최대급이었다. 이 기근은 여름에 연일 비가 내려 냉기가 쌓인 데다 8월 중순에 두 번이나 서리 피해를 입었던 전형적인 냉해형 기근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5월 상순부터 계속 내린 큰비가 결국은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이어졌다. 물난리로 물에 잠긴 땅은 한동안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산맥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여름 내내 찬바람이 불어서 벼 한 알조차 익지 못한 곳도 있었다.



덴메이기근도(天明飢饉之圖)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天明の大飢饉>

에도시대 최대 피해를 낸 것은 덴메이 연간의 대기근이었다.
 1782년부터 각지에서 연일 비가 내려 흉수가 났고,
 7월에는 지진까지 일어났다. ... 설상가상으로 4월부터 화산활동을
 시작해서 6월 하순에 격렬하게 분화하던 아사마야마가
 7월 8일에 대폭발했다.

에도시대 최대 피해를 낸 것은 덴메이(1781~1789) 연간의 대기근이었다. 1782년부터 각지에서 연일 비가 내려 흉수가 났고, 7월에는 지진까지 일어났다. 1783년 간토 지방에서는 봄부터 줄곧 비가 내리고, 여름에도 차고 습한 북동풍으로 인한 비로 겨울옷을 입고 지내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7월에 잠시 기온이 높아져 간신히 오곡이 익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4월부터 화산활동을 시작해서 6월 하순에 격렬하게 분화하던 아사마야마가 7월 8일에 대폭발했다. 이 분화로 2만여 명의 사람들과 많은 소들이 깔려 죽었고, 에도가와(江戸川)까지 그 시체가 흘러들었다. 각지에 화산재가 내렸으며, 성층권에 도달한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서 일사량이 부족해지자 다시 냉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도호쿠 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미증유의 흉작 피해가 더 커진 이유는 사람들이 날씨가 곧 회복될 것이라 믿고 그 전해에 쌀을 에도, 오사카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도호쿠 지방에서 매일 1,000~3,000명의 유민이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아사와 더불어 역병이 유행해서 1780~1786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92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잘라서 먹고 인육을 개고기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덴포기근과 사회 변동

1833~1837년에 걸쳐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된 덴포(1831~1845) 연간의 대기근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피해를 입혔다. 이 시기의 농업생산량은 기후

상품작물 재배로 농촌에 빈부 격차가 심해져 가난한 농민이
 다수 사망한 점, 상품작물 재배보다 쌀농사에 중점을 두었던 번의 피해가
 컸다는 점, 에도막부의 구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는데도
 각지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난 점 등 덴포기근은
 단순한 기근을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변화에 따라 1831년의 풍작, 그 이듬해는 평작, 1833년의 대흉작, 이듬해의 풍작을 거쳐 1835년과 1836년의 흉작으로 이어졌다. 흉작을 초래한 기후는 도호쿠 지방의 전형적인 냉해와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봄에 눈이 늦게 녹은 데다 찬 바람까지 불어서 모가 자라지 못했는데, 5월에 들어서는 갑자기 해가 뜨거워져 농작물이 타죽었다. 또 차가운 동풍이 불다가 기온이 갑자기 상승해서 병충해가 발생했고, 강한 일조가 계속되다가 냉해가 오는 등 기상 변화가 극심했다.

번에 따라서는 민간자금을 투입해서 구제대책을 세우고 비축미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50년 전 덴메이기근과 비교해서 사망자는 줄었다. 그렇지만 상품작물 재배로 농촌에 빈부 격차가 심해져 가난한 농민이 다수 사망한 점, 상품작물 재배보다 쌀농사에 중점을 두었던 번의 피해가 컸다는 점, 에도막부의 구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는데도 각지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난 점 등 덴포기근은 단순한 기근을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에도시대 기근은 단지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쌀이 최대 상품이었던 시장경제의 영향이 매우 컸다. 전국적인 기근과 쌀값 폭등에 대해 당시 오사카에서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올리고 있었지만, 쌀 부족은 점차 심각해졌다. 1837년 오사카에서 일어난 오시오 헤이achi로(大塩平八郎)의 난은 이러한 쌀 부족과 유통 구조의 문제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난은 조기에 진압되었지만 막부의 하급관리를 지낸 오시오가 오사카라는 주요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켜 이후 전국적인 반란을 촉발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상품작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농민층이 분화하고 봉건적 지배구조

가 흔들리는 가운데 막부는 1841년부터 개혁정책을 실시했지만, 덴포 연간의 개혁은 이전과 같은 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막번제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사회 전반에서 변화와 저항을 촉발하여 메이지유신의 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덴포 연간, 그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는 기후 변동에 의한 덴포기근이었다.

포커스 I

17세기 동남아시아의 글로벌 위기

조호연(趙浩衍, Jo, Ho-ye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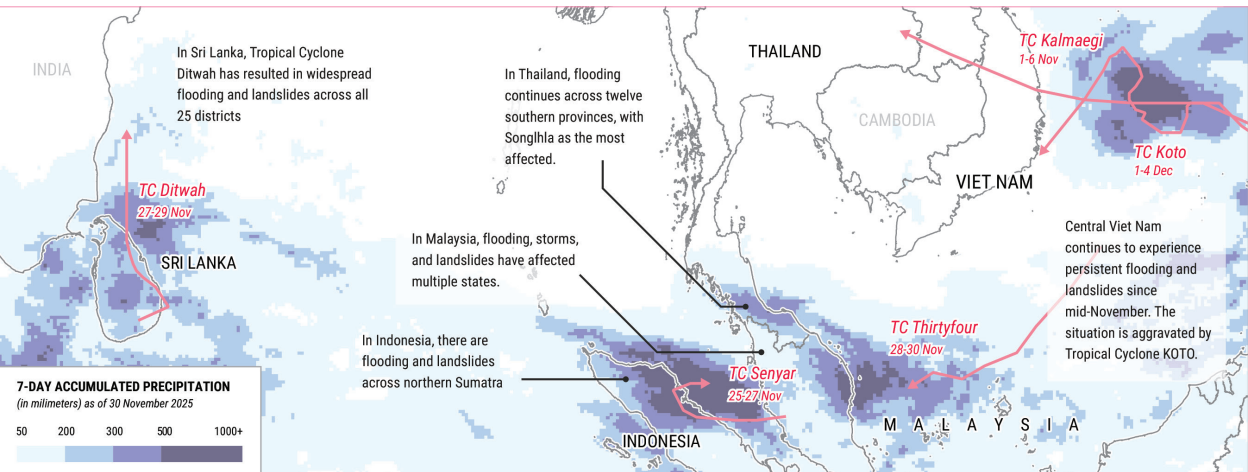
일본 오사카대학교 문학연구과에서 「近世ベトナム家譜研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17~19세기 북부 베트남 사회의 가족 제도와 촌락 구조를 동아시아 비교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베트남 자파(gia phả, 家譜) 속 여성의 입양(入養) 사례에 대한 시론」, 「Giới thiệu tài liệu chữ Nôm liên quan đến tổ tụng vào năm Khải Định thứ 8(1923)」, 「一六八七年濟州島民の安南漂流事件における〈安南太子殺害譚〉の再考」가 있다.



2025년의 이례적(?) 수해

2025년 11~12월 동남아시아는 유례없는 수해를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총강수량 300mm를 넘는 폭우가 내렸으며,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에서는 일일 강수량 600mm, 총강수량 1,500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12월 17일 기준으로 1,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해대책청(BNPB)에 따르면, 14일 기준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각각 1,016명과 21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난민 수는 62만 명에 달했다. 또한 한 NGO는 이번 호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겨울 우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따금 있어 왔지만, 올해처럼 피해가 대규모로 이어진 이유는 동남아시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기류가 해당 지역으로 집중



2025년 11월 17일~12월 3일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홍수 피해 현황

출처: <https://reliefweb.int/node/4189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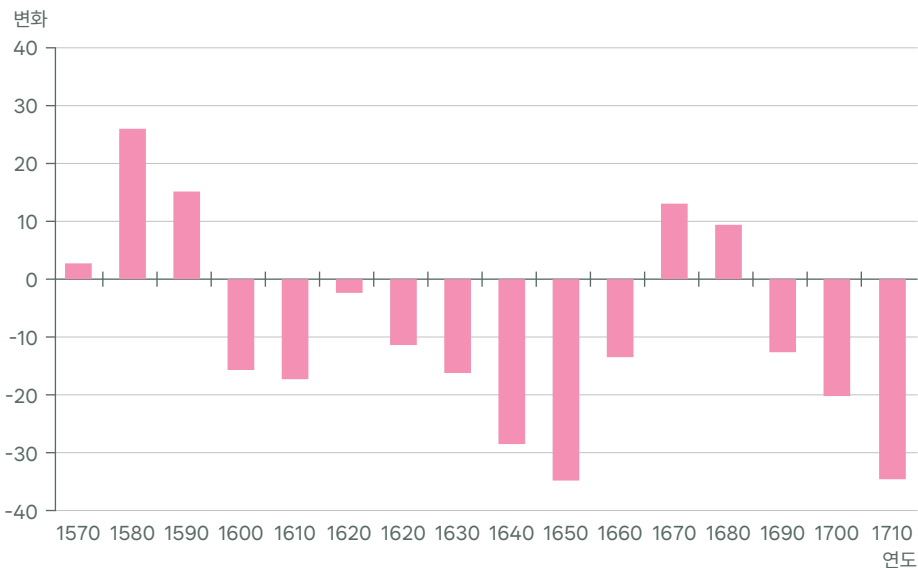
더욱이 농업·어업·관광 자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본다면, 현지 사회가 앞으로 적응해야 할 새로운 환경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기후 변동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삼림 벌채와 도시의 취약한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에서도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농업·어업·관광 자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빠진 『Global Crisis』

눈치 빠른 독자라면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온난화가 폭우와 홍수로 나타나므로,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강수량 감소와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실제로 19세기 초부터 1950년대까지 적도 부근의 기온 상승 폭은 약 0.6도에 그쳐, 온대지역 상승 폭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반대 극면인 한랭화 시기에도 적도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온 변동의 폭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7세기 소빙기(Little Ice Age)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재해는 추위가 아니라 가뭄이었다. 실제로 자바섬 중부의 나이테 자료를 통해 강수 패턴을 분석한 결과, 17세기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프리 파커(Geoffrey Parker)의 『Global Crisis』에 따르면, 자바섬에서는 1633년부터 1665년 사이에 총 여섯 차례의 기근이 발



자바섬 중부의 나이테 폭 변화

출처: Geoffrey Parker, 2013, *The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p. 412

생했으며, 이는 문헌사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런데 파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인도네시아(나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소빙기의 영향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 기온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고, 토지에 비해 인구가 적어 경작지가 풍족했다는 점이다. 또한 식물의 다양성 덕분에 주식작물이 실패하더라도 뿌리채소나 약초 등에 의존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가 밀집된 연안지역의 경우 해상무역을 통해 식량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풍요가 빈곤으로 전락한 것은 일본의 쇄국과 명·청 교체에 따른 해상무역의 위축,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독점무역과 같은 인간 행위로부터 초래된 결과였다는 것이 파커의 결론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설명은 『Global Crisis』가 다른 지역을 분석할 때 사용한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는 동남아시아가 자연적인 풍요로움을 지니

파커의 서술은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분리된 예외적 공간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이해될 여지를 남기고 말했다.

고 있었음에도, 정치·경제적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17세기에 광범위한 기후위기가 있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사회 혼란과 내전, 나아가 정권 붕괴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파커의 서술은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분리된 예외적 공간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이해될 여지를 남기고 말했다.

'글로벌 위기' 속 동남아시아

1990년대 글로벌 히스토리는 서유럽이나 중국, 일본을 특수한 사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띠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동남아시아사를 보다 넓은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려는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앤서니 리드(Anthony Reid)와 빅터 리버먼(Victor Lieberman)이 있다. 그리고 기후 변동과 17세기 기후위기는 이들의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를 이룬다. 동남아시아의 다양성을 상징하듯, 이들의 논점과 주장은 각각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온 자바섬(도서부)과 미얀마(대륙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리드는 유럽 중심적인 '대항해시대(Age of Discovery)'를 대신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역의 시대(Age of Commerce)'라는 개념을 제창한 역사학자다. 그는 주로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초까지 교역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해상국가들이 출현했으며, 이들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화기(火器)를 구입하고 용병을 고용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이고 전제적인 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왕실은 정크(junk)선이나

리드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더해 “전체 인구 변동 기록은 서로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더 광범위한 세계적 양상 간의 일련의 연관성을 보여주므로” 기후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갤리온(galleon)선을 구입해 상업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해상무역을 매개로 세계 종교가 각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을 초월한 문화적 단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앞서 언급한 요인-사실상 파커가 리드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을 배경으로 장거리 무역이 쇠퇴하자, 이러한 국가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화기와 용병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국가는 분열되었고, 선박 역시 소형화되어 유럽의 함선에 대항할 수 없었다. 세계 종교 역시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각 지역의 언어와 관습에 맞춘, 보다 지역적(vernacular)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경제 구조는 교역 중심에서 벗어나 내향적인 농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리드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더해 “전체 인구 변동 기록은 서로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더 광범위한 세계적 양상 간의 일련의 연관성을 보여주므로” 기후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필리핀 루손섬(스페인령)과 말루쿠 제도 중부(네덜란드령)의 인구 자료 및 징세 기록을 통해서도 기후와 인구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베트남 홍하(紅河) 델타의 촌락 수 변화 역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즉, 징세를 목적으로 기록된 촌락 수가 17세기, 특히 기후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뚜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16세기 중엽 이후 베트남이 극심한 내전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17세기 중엽에 감소한 인구가 이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농촌의 기반 조건, 즉 기상환경이 그만큼 악화되었음을 방증한다.¹

1 앤서니 리드 지음, 박소현 옮김, 2025, 『대항해시대의 동남아시아』, 글항아리, 728~738쪽.

북부 베트남의 촌락 수와 인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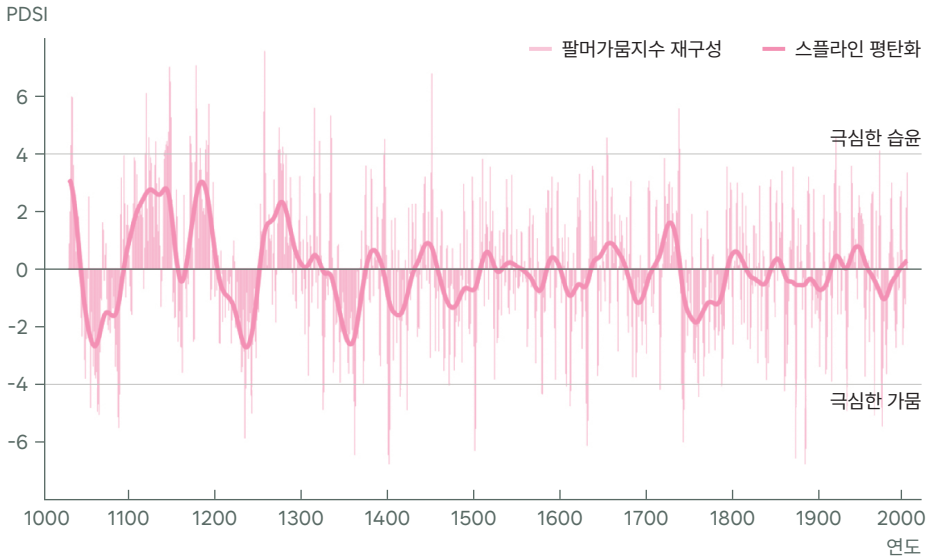
연도	촌락 수(호)	인구 수(명)	연평균 증가율(%)
1417	3,885	1,861,750	—
1490	7,950	4,372,500	0.50
1539	10,228	5,625,400	0.22
1634~1643	8,671	4,769,050	-0.07
1730	11,766	6,471,300	0.13
1750	10,284	5,656,200	-0.29
1810	10,635	5,849,250	0.16

출처: 桃木至朗, 1997, 『周辺の明清時代史: ベトナム經濟史の場合』, 岸本美緒 外 編,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620쪽.

이처럼 리드에게 17세기의 기후위기는 ‘동남아시아 빈곤의 기원(The origins of Southeast Asian poverty)’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었다. 반면 리버먼에게 기후는 역사적 변동을 추동하거나 제약하는 조건이었지만, 다른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요인이었다. 이는 리버먼이 적어도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경우, 10세기경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장기적인 정치적 통합의 추세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통합과 붕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통된 리듬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는 파간(Pagan), 앙코르(Angkor), 대월(Dai Viet), 참파(Champa) 네 국가가 종교·정치·행정 전반에 걸쳐 후대 제국(帝國)들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규범, 즉 ‘헌장(charter)’의 역할을 했으므로 10~14세기를 ‘헌장의 시대(Charter Era)’로 명명하였다.²

기후 변동과 관련하여 리버먼은 10~19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네 시기

² 이 개념을 한국사에 적용하면 Korea의 어원이 된 고려(Goryeo)가 ‘헌장의 시대’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한다.



베트남 남부의 강수량 비도웁누이바국립공원(Bidoup Nui Ba National Park)의 편백나무 나이테 폭을 바탕으로 복원한 팔머가뭄지수(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출처: Victor Lieberman & Brendan Buckley, 2012, "The Impact of Climate on Southeast Asia, circa 950-1820: New Findings," *Modern Asian Studies* 46(5), p. 1057

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인 950~1250(1300)년은 현장 국가들이 형성·번영한 시기로, 강한 몬순과 비교적 안정적인 강수 패턴이 농업 생산과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며 국가 형성의 환경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 시기인 1250(1300)~1450년에는 소빙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뭄과 강수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이는 누적된 생태적·제도적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내란과 외침, 왕조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들 시기에 기후가 결정적인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변동의 진폭이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세 번째 시기인 1450~1610년은 기후 변동의 폭이 이전보다 완화된 가운데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며 점진적인 정치적 재통합이 이루어진 시기다. 이 시기에는 군사기술, 행정제도, 상업활동 등 비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보다 커졌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인 1610~1820년에는 버마(Burma)·시암(Siam)·월남(Viet Nam)과 같은 대형 국가들이 영토 통합과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확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가 역량이 증대하여 기후가 정치·사회적 변동을 좌우하지 못했다는 것이 리버먼의 결론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유라시아 세계 전반에서 나타난 역사적 궤적과 ‘기묘한 평행(Strange Parallels)’을 이룬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대륙부 지역의 정치체는 17세기의 기후위기를 10세기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제도적·행정적 역량을 통해 조정·극복해 나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응 방식: 베트남의 사례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자. 1663년 7월, 레 왕조 현종(玄宗)은 유교적 규범을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교화(教化) 47조를 반포하였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객인(外國客人)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10월에는 화랑도(花郎道), 즉 가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였다. 이미 1650년에는 중국인과 베트남인의 잡거(雜居)를 금지하고, 외국인의 재류지를 홍하 하류의 포히엔(Phó Hién, 庸憲)으로 한정하는 바 있다.

일부 논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17세기 들어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 유학자층이 상업활동을 경시하고 배외주의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하며, 그에 따라 베트남에서 ‘교역의 시대’가 쇠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국제무역의 쇠퇴에 대응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1638년 일본의 에도막부가 동전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면서 홍하 델타에 동전 부족이 초래된 적이 있고, 1654년에는 생사(生絲)의 대홍작과 물가 상승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동남아시아 도서부 지역이 국제무역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그 부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명·청 교체로 인해 중국인 상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베트남이 비교적 신속

‘교역의 시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글로벌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혼란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연동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계 해외무역의 영향력을 낮추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베트남 사회의 제도적·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의 성과는 1730년에 촌락 수가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53쪽 표 참고).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후 변동은 인류가 언제나 마주해 온 조건 가운데 하나였으며, 오늘날 ‘인류세(Anthropocene)’로 불리는 시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나타났던 위기와 그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교역의 시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글로벌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혼란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연동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기후위기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른 지역의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커스 II

유럽: 위기 속 재편

30년전쟁과 17세기 위기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복합 위기 속 러시아: 과거와 현재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잉글랜드혁명의 소빙기: 민중과 국가

김철기 전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30년전쟁과 17세기 위기

김준석(金俊奭, Kim, Joon-suk)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유럽 국제정치사와 국가 형성의 역사이며, 『근대국가』, 『국제정치의 탄생: 근대 초 유럽 국제정치사의 탐색, 1494-1763』 등의 책을 썼다. 현재 '19세기 유럽 국제관계사'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들어가며

30년전쟁(1618~1648)은 유럽사에서 ‘근대 초’로 알려진 16세기에서 18세기의 약 3세기 동안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 30년이라는 예외적으로 긴 기간 동안 거의 매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공화국, 스웨덴 등 당대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직접 참전하거나 싸움에 관여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막심했다. 주된 전장이었던 독일의 경우 전쟁의 결과 인구가 20~4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유럽 전체로 보아도 당시 1억 명 정도로 추산되는 유럽인 중 약 800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30년전쟁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전쟁을 계기로 유럽은 근대국가로서 관료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주권이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는 등 ‘중세의 잔재’를 떨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변화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그간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역사 전공자들에게도 30년전쟁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조선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던 시기에 발발한 이 전쟁은 그 원인과 전개 양상 그리고 종결 과정이 더할 수 없이 복잡다단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만 60개월이 소요될 정도였다. 이 전쟁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쟁 자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당대 유럽 역사에 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신성로마 제국이 16세기 이후 작동한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스부르크가문이 다수의 영토를 획득하고 운영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전쟁이 유럽 대륙 이외의 지역에 미친 영향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알아보거나 연구할 동기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 30년전쟁은 국제정치학과 국제법 전공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지은 1648년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이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제법의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 간간이 언급되는 데 그쳤다.

30년전쟁은 유럽사에서 '근대 초'로 알려진
16세기에서 18세기의 약 3세기 동안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0년전쟁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17세기 위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가 16세기의 '성장'과 '발전'의 추세가 뒤집어진 시기이자 정치, 경제, 인구, 문화, 종교, 기후 등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총체적 위기의 시기였다는 '17세기 위기론'은 지난 1950년대 처음 제기된 이래 서구 역사학계에서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영국 출신 역사학자 제프리 파커(Geoffrey Parker)가 이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다.¹ 30년전쟁은 이와 같은 17세기 '위기'의 한가운데서 발발했다. 위기는 전쟁을 낳았고, 전쟁은 위기를 부추겼다. 현재 세계는 팬데믹과 기후 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비롯한 전쟁의 빈발 등으로 17세기 못지않은 심각하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30년전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또한 적지 않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30년전쟁의 시작과 전개

1618년 5월 23일, 당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던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오스트리아의 강경한 반(反)프로테스탄트정책에 반감을 품은 일군의 귀

1 Geoffrey Parker, 2013,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족들이 합스부르크에 충성하는 두 명의 관리를 프라하성 창문 밖으로 내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30년전쟁은 이 일로 촉발된 반란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빠른 속도로 프라하와 보헤미아 전역을 장악한 반란세력은 보헤미아에 대한 합스부르크 지배의 종식을 선언하고, 서부 독일에 위치한 선(選)제후국² 팔츠(Pfalz)의 통치자이자 독실한 칼뱅교도였던 프리드리히 5세에게 보헤미아의 왕위를 제안했다. 위험 부담에도 프리드리히 5세는 이 제안에 응했고, 보헤미아인들의 환호 속에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620년 프리드리히 5세와 반란세력이 이끄는 군대는 ‘빌라호라(Bílá Hora)전투’에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작센 등이 참여한 합스부르크 연합군에게 패배했고,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다.

만약 오스트리아가 반란을 진압한 데 만족하고 상황을 일단락 지었다면 우리가 아는 30년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빠른 성공에 도취한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2세는 반란을 주도한 보헤미아의 귀족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팔츠를 점령한 후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자격으로 반란 진압에 도움을 준 바이에른 대공에게 프리드리히 5세의 선제후 지위를 수여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선을 넘는’ 행동이었으므로 큰 위협을 느낀 제국 내의 프로테스탄트 제후국들은 힘을 합쳐 합스부르크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합스부르크 연합군이 독일 북부지역 일부를 점령할 만큼 전황이 프로테스탄트 제후국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북부 유럽의 두 프로테스탄트 왕국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1625년과 1630년에 전쟁에 개입했다. 두 나라는 프로테스탄트 제후국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표 외에도 북부 독일과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²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황제 선출권을 가지는 제후국으로 제국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서열에 속했다. 30년전쟁 발발 당시에는 팔츠를 비롯하여 마인츠, 트리어, 쾰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보헤미아의 7개 선제후국이 존재했다.



브라이텐펠트전투(1631)에서의 구스타브 아돌프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trasbourg_walter_gustave_adolphe.JPG

염두에 두고 개입했다. 덴마크의 개입은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1629년에 종료되었지만, 구스타브 아돌프 국왕이 이끄는 스웨덴군은 1631년 브라이텐펠트(Breitenfeld) 전투에서 합스부르크 연합군에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1632년 뤼첸(Lützen) 전투에서 구스타브 아돌프가 전사하고, 1634년 뇌르틀링겐(Nördlingen)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합스부르크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1635년 오랜 기간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던 프랑스가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국가임에도,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프랑스 내의 위그노교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음에도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일차적인 전쟁 목표는 자

국에 이웃한 독일 지역이 합스부르크에 장악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고, 최종적인 목표는 16세기 초부터 유럽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치열하게 경쟁해 온 합스부르크 세력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 프랑스는 30년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합스부르크 스페인과 10년 이상 전쟁을 벌였다.

1648년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의 체결로 전쟁은 막을 내렸다. 조약의 결과, 프랑스와 스웨덴은 상당한 크기의 영토를 획득하며 큰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합스부르크 세력의 부상을 강력히 억제했다. 제국 내의 수많은 제후국들은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었고, 전쟁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던 제국 외의 국가와 동맹을 맺을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프랑스와 스웨덴이 '제국질서'의 보호자로 자처함에 따라, 제후국들은 합스부르크의 영향력 확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종교 갈등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가톨릭 진영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위기와 30년전쟁

17세기는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걸친 총체적인 위기였지만, 30년전쟁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특히 중요하다. 먼저, 30년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유럽은 심각한 경제적 쇠퇴와 현저한 인구 감소를 겪었다. 시작은 '소빙기(Little Ice Age)'의 도래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하락이었다. 기후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16세기 말부터 유럽 대륙의 평균기온은 그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17세기 유럽의 기온은 그 이후의 세기에 비해 평균 0.50°C 정도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온 하강이 태양 흑점의 감소, 활발한 화산활동에 따른 화산재의 증가, 서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온 하강으로 긴 겨울과 추운 여름이 일상화되었고, 홍수와 가뭄도 빈번해졌다. 1617년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한 달 동안 비가 끊이지 않고 내렸는데, 마지막 나흘 동안에는 마을과 다리가 휩쓸려 내려갈 정도였다. 1620~1621년 겨울에는 유럽 전역이 푹푹 얼어붙었다. 대다수 강이 석 달 이상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다녀도 끄떡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심지어는 보스포루스해협까지 얼어붙어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서 지나다녔다고 전한다.³

계속되는 이상기온은 잇따른 흉년을 초래했고, 큰 폭으로 감소한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유럽은 중세 말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되었다.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1600년부터 1650년 사이에 각각 16퍼센트와 14퍼센트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였다. 이전 세기에 인구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대인들에게 이러한 인구 감소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에 17세기 초부터 신대륙으로부터의 은 유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도 경제위기에 일조했다. 161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3만 톤가량의 은이 신대륙으로부터 스페인의 세비야에 도착했지만, 1640년대에는 그 양이 고작 1만 3,000톤에 불과했다. 은 유입량이 감소하자 각국 정부는 주화의 은 함유율을 낮춰 통화가치를 절하했는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과 상공업 활동의 위축, 대량 실업사태 등을 차례로 유발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가 30년전쟁의 발발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여러 추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1618년 보헤미아인들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중부 유럽은 잇따른 흉년으로 농업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물론 반란 주도 세력은 오스트리아가 강경한 반프로테스탄트정책을 앞세워 보헤미아인을 억압하려 한다는 점을 반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반란의

3 Geoffrey Parker, 2013,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3.



Israel ex. Cum Privil. Reg.

*Voilà les beaux exploits de ces cœurs inhumains
Ils rasiagent par tout rien nechoppe ti leur mains*

*L'un pour avoir de l'or, i'auente des supplices,
L'autre à nul forfait, amme les complices ;*

*Et tous d'un mefme accord commettent mechamment
Le vol, Le rapt, Le meurtre, et le violement. . 5*

30년전쟁 당시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

출처: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20787>

길을 택하도록 부추겼으리라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로 초래된 불안감이 당대인들의 종교적 열정에 불을 붙였고, 이것이 16세기 중반에 어렵사리 구축된 종교화의를 무너뜨리고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가톨릭 진영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전쟁의 발발을 앞당겼으리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⁴ 자신의 지위와 생존이 위협받을 때 자신과 다른 신념, 국적, 피부색을 가진 이들에 대한 공격적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난 수 백 년간 수없이 확인된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30년전쟁이 발발했다는 점 못지않게 전쟁이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악화시켰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30년전쟁은 유례없이 치열하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전

⁴ Peter H. Wilson, 2008, "The Causes of the Thirty Years War, 1618-48," *English Historical Review* 123-502, p.573.

30년전쟁은 ‘17세기 위기’를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그 자체가 되었다.

쟁 후반부로 갈수록 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고갈된 각국 군대가 광범위하게 약탈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피해는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거의 모든 참전국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을 단행하고, 소금이나 광산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강화했다. 그래도 치솟는 전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화폐 가치를 조작하기도 했다. 정부의 약탈적인 자원과 재원 수탈은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유럽 경제에 결정타를 날렸다. 30년전쟁은 ‘17세기 위기’를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그 자체가 되었다.

정치위기와 30년전쟁

17세기 ‘위기’가 기본적으로 정치위기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기와 30년전쟁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입장에서 위기의 본질을 중앙정부와 귀족과 지방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에서 찾는다. 특히 17세기에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귀족과 지방세력의 반란이 매우 빈번하게 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잉글랜드내전, 프랑스 프롱드의 난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카탈루냐, 포르투갈, 나폴리, 시칠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지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17세기 내내 이어졌다. 반란을 일으킨 이

5 Niels Steensgaard, 1997, “The Seventeenth-Century Crisis,”
G. Parker and L. M. Smith eds., *The General Crisis of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heilagh C. Ogilvie, 1992, “Germany and the Seventeenth
Century Crisis,” *Historical Journal* 35-2.



1618년 보헤미아반란의 도화선이 된 창문투척사건

출처: <https://www.digitale-sammlungen.de/en/view/bsb10807439?page=34>
 (Matthäus Merian, 1635, *Theatrum Europaeum* Vol. 1, p. 34)

들은 날로 강력해지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귀족과 지방의 오래된 특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반란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귀족과 지방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17세기 들어 그들과 중앙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이 후자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점점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관료기구와 당대의 최첨단 전쟁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거느린 중앙정부는 귀족과 지방세력에게 특권의 폐지와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구했으므로, 대다수의 귀족과 지방세력은 ‘과거 좋았던 시절로의 복귀’를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30년전쟁의 발단이 된 1618년의 보헤미아 반란 역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중앙정부의 점증하는 권력과 그에 따른 보헤미아의 자율성 축소에 대한 불만이

17세기의 유럽인들은 이전 세기의 추세가 뒤집어지는 경험,
과거의 낙관론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경험을 공유했으며,
30년전쟁은 그들의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불만에 불을 붙인 것은 빈(Wien) 정부의 강압적인 종교정책이었다. 잉글랜드내전과 루이 13세 시기 프랑스의 위그노전쟁 역시 유사한 이유에서 발발했다. 17세기 이전까지 보헤미아는 종교문제에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누렸다. 1520년대 이래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 헝가리 등을 통치했고, 1556년 카를 5세의 뒤를 이어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페르디난트 1세와 그의 후손들은 독실한 가톨릭교도였음에도 그들의 스페인 사촌들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을 금지하거나 탄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반란이 발발할 무렵에는 보헤미아 인구 중 개신교도의 비율이 60~70퍼센트에 이르렀다. 하지만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합스부르크가 구성원 사이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고 알려진 이가 오스트리아 대공의 직위를 계승하고 보헤미아의 왕관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자, 보헤미아인들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점증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귀족-지방세력이라는 도식은 보헤미아반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 30년전쟁의 전개 과정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헤미아 왕위를 수락한 프리드리히 5세의 영지인 팔츠를 빼앗고 그의 선제후 지위를 바이에른 대공에게 수여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강경책에 위협을 느낀 신성로마제국의 프로테스탄트 제후국들이 힘을 합쳐 저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쟁은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6세기 이후 독일의 신성로마제국은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누리는 300개 내외의 세속제후국과 교회제후국, 자유제국도시 등이 느슨하게 결합된 일종의 ‘국가연합’이었다. 그럼에도 15세기 이래 황제의 직위를

사실상 독점에 온 오스트리아의 통치자들은 제국의 우두머리로서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제후국들은 오스트리아의 공세적인 정책이 그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황제와 제후국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저항을 결심한 것이다.

마치며

위기는 전쟁을 낳았고, 전쟁은 위기를 부추겼다. 물론 둘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태양 흑점의 감소와 30년전쟁의 발발 사이에는 고려해야 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17세기에 ‘위기’가 과연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위기가 아닌 시대가 있었던가? 하지만 최소한 17세기의 유럽인들이 이전 세기의 추세가 뒤집어지는 경험, 과거의 낙관론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경험을 공유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0년전쟁은 그들의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오랜 기간 당연시되었던 많은 것들이 불현듯 사라지는 시대에 17세기 유럽의 경험을 찬찬히 되돌아볼 이유는 충분하다.

복합 위기 속 러시아 과거와 현재

이주연(李柱衍, Lee, Ju-ye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러시아 외교정책, 유라시아 지역 분쟁, 한러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인의 집단감정 연구」, 「카자흐스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요인 분석: 브레처 모델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들어가며

러시아 서정시인 표도르 추체프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러시아인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보편적인 잣대로 잴 수 없다. 러시아에 독특한 고유함이 있으니, 러시아는 오직 믿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러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한 이유는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면서,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다른 특수한 발전 경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령 러시아는 988년 정교회 수용으로 유럽의 가톨릭 문화와 다른 종교 문화를 내재화했다. 그리고 몽골의 침략으로 1240년부터 1480년까지 지배를 받았다. 이때 유럽은 르네상스를 통해 예술 문화가 꽃을 피웠지만, 러시아는 서유럽과 같은 형태의 르네상스는 경험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시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의 역사 발전이 아닌 러시아의 특수한 역사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글은 러시아가 유럽과 다른 역사 발전 경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특히 17세기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의 특수한 역사와 현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17세기인가? 많은 학술적 논쟁이 있지만, 17세기는 기후 관점에서 소빙기 시기로 많은 지역에서 기근, 폭동, 전쟁 등이 발생하면서 총체적 위기(*general crisis*) 시대였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17세기에 총체적 위기를 겪었고, 해당 시기를 ‘스무타(*Smuta*, *Смута*: 동란의 시대)’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17세기 위기를 겪은 유럽은 이후 근대 국가, 사회계약 담론 등이 형성된 것과 다르게 러시아는 전제권력 강화, 농노제 고착 등 다른 역사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17세기 러시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1세기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지반 침하, 홍수, 폭설, 대형 산불, 질병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이 발

러시아도 17세기에 총체적 위기를 겪었고, 해당 시기를
'스무타(동란의 시대)'로 부르고 있다.

발했는데, 이 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막심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17세기와 유사한 복합위기로 보고 비교사 관점에서 러시아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란의 시대: 기근, 가짜 드미트리, 폴란드의 침략

17세기 러시아의 위기를 서술하기에 앞서, 그전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0년이라는 기나긴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러시아(당시 모스크바대공국)는 280만km²의 영토와 900만 인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 특히 이반 4세는 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를 다스린 류리크(Rurik) 왕조의 지도자 중 최초로 '차르(Tsar, Царь)' 칭호를 받으면서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다. 강력한 중앙집권과 함께 국가의 팽창도 이루어졌다. 세 차례의 원정으로 카잔칸국(1552), 아스트라칸국(1556)을 붕괴시켰고, 시베리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반 4세의 영토 팽창이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다. 1558년 러시아가 발트해 진출을 위해 리보니아(Livonia) 기사단을 참패시키자, 이에 위협을 느낀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등 북방지역 연합세력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은 1583년 휴전에 이르기까지 25년간 치러졌지만, 러시아가 리보니아 지역에 대한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 러시아에게 전쟁의 성과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북방지역 국가들과 갈등관계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발전은 마치 파도와 같았다. 이반 4세 시기 정점을 찍은 이후 러시아는 급격히 몰락했다. 1584년 이반 4세 사망 이후 후계자 문제가 발생했다. 세 아들 중 황태자인 장남 이반은 아버지 이반 4세에게 쇠지팡이로 맞아



이반 4세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B0%98_4%EC%84%B8

죽었고, 차남 표도르는 병약하고 어리석었으며, 삼남 드미트리야는 생후 6개월로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젼스키 소보르(zemsky sobor, Земский Собор: 전국회의)’는 표도르의 처남 고두노프를 차르로 선출했다. 고두노프는 경제 부흥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영토 확장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1601년부터 3년간 대기근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가 발생했다. 1601년부터 시작한 기상 이변으로 여름철에도 서리가 내리면서 지속적인 흉작이 발생했다. 대기근의 영향으로 약 200만 명(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극심한 기근의 영향으로 농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는 고두노프 권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한편, 고두노프에게 유배를 당한 드미트리야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미트리야로 주장하는 ‘가짜 드미트리야’가 폴란드에서 나타났다. 고두노프 사망 이후 이 참칭자는 러시아와 적대관계였던 폴란드의 지원을 받아 모스크바총주교

1601년부터 시작한 기상 이변으로 여름철에도 서리가 내리면서 지속적인 흉작이 발생했다. 대기근의 영향으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로부터 차르의 관을 수여받았다. 흥미롭게도 이 참칭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미트리의 어머니가 유배에서 풀려나 참칭자가 진짜 아들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짜 드미트리가 자신을 지지했던 폴란드 세력을 고관으로 임명하고 폴란드 용병들이 횡포를 부리자, 러시아 대귀족 바실리 슈이스키가 가짜 드미트리를 죽이고 제위에 올라 모스크바에 국한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러시아 전반에 걸친 사회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농민들의 봉기가 지속됐다. 1606년 ‘차르 드미트리’의 지방관임을 자처하는 볼로트니코프의 반란이 발생했다. 반란은 어렵게 진압되었지만, 1608년 폴란드의 지원을 받은 두 번째 가짜 드미트리 사건이 발생했다. 1610년 차르 슈이스키는 두 번째 가짜 드미트리를 죽였으나, 이 사건으로 혼란한 틈에 폴란드는 모스크바로 진격하여 슈이스키를 폐위시키고, 폴란드 왕자 브라디슬라프를 새로운 차르로 선출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러시아 국민은 꺾기하여 포자르스키 공작을 중심으로 국민군을 조직했고, 1612년 11월에 폴란드 세력을 몰아내었다.

로마노프 왕조의 탄생과 러시아식 국가 발전

총체적 위기 속 왕조 교체는 곧바로 평화와 안정으로 귀결되지 못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러시아 역사가 코스토마로프는 “미성년자인 미하일 표도로비치가 선출되었을 때처럼, 그토록 슬픈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군주가 제위에 오른 사례는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국내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지 못했고, 폴란드와 스웨덴과의 전쟁도 지속하여 국고가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1647년 영국의 중

국가적 위기 속에서 러시아 국민은 결기하여
포자르스키 공작을 중심으로 국민군을 조직했고,
1612년 11월에 폴란드 세력을 몰아내었다.

재로 스웨덴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핀란드만 일대를 양도했고, 1648년에는 스몰렌스크와 노브고로드 북부를 폴란드에 할양했다. 즉, 동란의 시대 여파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은 2대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는 1649년에 쟈스키 소보르의 비준을 얻어 러시아 최초로 근대적 통일법전인 울로지에(Ulozhenie, уложение)를 제정했다. 이 법전으로 군주권은 최고의 권위로 규정되었고, 이것은 러시아 전제국가체제의 초석이 되었다. 문제는 해당 법전이 사실상 농노제를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법을 통해 농노의 추적 기한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었고, 이로써 농노가 완전히 영주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농노제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전제왕권 강화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국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단기적 이익이 있었다. 또한 초기에 농민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농민 불만과 봉기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기술 발전 약화, 자본주의와 산업화 지연, 그리고 사실상 노예제에 가까운 인권문제 등이 여실히 나타났다. 그랬기 때문에 17세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서유럽이 왕권 약화,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아간 것과 다르게, 러시아는 전제적 국가 발전 경로를 걷게 되었다.

기근과 농노제 강화는 농민의 이탈을 추동했다. 특히 당시 폴란드 지배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지역 드네프르강 하류 거주민과 도망친 농노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며 ‘자포로제(Zaporizhzhia, Запорожье: 급류 건너편) 카자흐’ 집단이 형성되었다. 카자흐 집단은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이어갔지만, 점차 폴란드가 카자흐

농노제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전제왕권 강화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국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단기적 이익이 있었다. ... 17세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서유럽이 왕권 약화,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아간 것과 다르게,
러시아는 전제적 국가 발전 경로를 걷게 되었다.

고유의 자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호멜니츠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1651년 카자흐 집단이 폴란드군에 패배하자, 호멜니츠키는 같은 동방정교를 믿는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했다. 러시아가 카자흐의 보호 요청을 수락하면서 1654년 페레야슬라프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13년간 이어졌지만, 1667년 결국 러시아와 폴란드는 휴전협정을 체결했고, 이로써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볼가강의 배 끄는 인부들(일리아 레핀, 1870~1873)

출처: <https://rusmuseum.ru/collections/painting-of-the-second-half-of-the-xix-century-beginning-of-xxi-century/burlaki-na-volge/>

21세기 복합위기 속 러시아

17세기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역사 발전은 서구와 다른 발전 경로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정체성은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특수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 기근, 전쟁 등 국가와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정체성의 변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이다.

17세기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21세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우선 21세기 지구온난화 현상이 러시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므로 기후문제에 비교적 적극적이지 않았다. 탄소 배출 문제에서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판매량이 감소하면 자국 경제에 치명적이므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러시아도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기후 및 환경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러시아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문제다. 2016년 러시아 북쪽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탄저균 포자가 지표로 유출되어 2,500마리 순록과 36명의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둘째, 홍수 피해 문제다. 2024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가옥 1만 2,800여 채가 침수되었고, 7,700명 이상이 대피했다. 셋째, 산불 피해 문제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매년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데, 2021년과 2023년 사하공화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서울 면적의 100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었다. 심지어 러시아 산불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2025년 4월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지방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식량안보 문제다. 전통적인 식량기지인 불가분지와 북코카서스 등 러시아 동남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하고 곡물 유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러시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를 이용했을 때보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 운송거리를 약 30~40%, 그리고 10~15일 정도 운항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LNG, 원유, 희토류, 금속 광물 등 전략자원 수출 핵심통로로 기능하여 에너지·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러시아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북극항로의 개발에 따라 러시아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러우전쟁은 21세기 러시아에 하나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러우전쟁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강제 병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17세기 폴란드와의 전쟁 상황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러우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피해도 막심하다.¹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년 동안 러시아군 사상자를 총 120만 명(사망자 32만 5,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국방비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러시아 GDP의 약 7.1%에 다다랐다. 반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5년 글로벌혁신지수(GII)에 따르면, 러시아는 139개국 중 60위로 러시아의 경제 규모 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모습이다. 즉, 현재 러시아는 국가 기술 발전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사용할 군수품에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러시아가 농노제를 통해 국가를 운영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러시아는 복합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이 위기는 러시아 혼자 해결할 수 있

1 이 글은 러시아의 복합적 위기라는 상황을 주제로 하므로 우크라이나의 피해와 참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러우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측의 막대한 피해 규모를 감추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절대로 러우전쟁의 피해자가 러시아라고 주장하거나 러시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 변화는 특정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다. 또한 러우전쟁도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이해 당사국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 질수록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잉글랜드혁명의 소빙기

민중과 국가

김철기(金哲起, Kim, Chulki)

전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뉴욕주립대학교 빙햄튼 캠퍼스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초 영국, 아일랜드, 영제국의 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 헌팅턴도서관의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교환 펠로우, 경희대학교 사학과 BK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뉴욕주립대학교 빙햄튼 캠퍼스,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쳤다.



기후 변화에서 반란으로

만민의 목자는 나라 안 폭풍우의 징조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사람의 신분이 평등해지고 있을 때 가장 기세등등하다. 마치 자연계의 폭풍우가 춘분과 추분 무렵 가장 기세등등한 것과 흡사하다. 또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몇 줄기 허허로운 바람이 불고, 남모르게 바다가 부풀어오르듯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조짐이 있다.¹

잉글랜드의 정치가이자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위와 같이 반란을 폭풍우에 빗대며 「반란과 소란」이라는 글을 시작한다. 이 글이 출판된 1612년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굶주릴 수도 있는 소빙기(the Little Ice Age)의 한복판이었다. 지난 천 년간 가장 추운 시기라 불리는 소빙하기는 대략 1450년에서 1850년 사이로 설정되지만, 최근 연구자들은 가장 추운 정점은 1594년에서 1677년까지의 시기로 본다. 기온 하강으로 수확량이 떨어지기 쉬운 이 시기에 베이컨은 반란의 ‘재료’로 불만보다는 빈곤에 주목했다. ‘배고파서 일어나는 반란’이 ‘최악의 것’이기 때문에, 빈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거하는 것이 반란을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소빙기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가 어떻게 반란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기후 변화를 빗대어 반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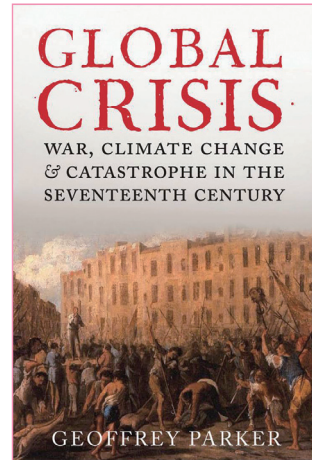
군주는 이 불만이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를 가지고 그 위험을 측량해서는 안 된다. ... 비록 새어 나오는 김과 연기가 그대로 폭풍우를 몰아오지는 않지만, 비바람이 자꾸 스쳐 지나가면 결국은 폭풍우가 내리칠 것이 분명하다.

1 프랜시스 베이컨 지음, 김길중 옮김, 2004, 「반란과 소란」(1612), 『베이컨 수필집』, 문예출판사, 63~72쪽.

“군주는 이 불만이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를 가지고 그 위험을 측량해서는 안 된다. … 비록 새어 나오는 김과 연기가 그대로 폭풍우를 몰아오지는 않지만, 비바람이 자꾸 스쳐 지나가면 결국은 폭풍우가 내리칠 것이 분명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반란 역시 여러 요소가 누적되어 (본질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위기적 현상 같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새어 나오는 김과 연기’와 누적되는 ‘비바람’처럼 종교적 변화, 세금, 법률, 관습의 변화, 특권의 박탈, 억압, 자격 없는 사람의 정치적 중용, 외국인 관련 문제, 노동자의 기근, 해산된 병사, 치열한 파벌 싸움 등등 여러 요소가 어느 순간 민중의 분노를 사 반란으로 돌변하게 된다고 보았다.²

2013년 역사가 제프리 파커(Geoffrey Parker)는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번역하면 『지구적 위기: 17세기의 전쟁, 기후 변화, 재앙』)을 출간했다. 핵심 주장은 배고픔이 반란으로 이어지는 베이컨의 반란모델에 기후 변화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후가 하강하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배고픔이나 식량난이 발생하며, 그것이 전쟁이나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다른 위기와 결합하고 누적되어 (궁극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그것은 반란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² 프랜시스 베이컨 지음, 김길중 옮김, 2004, 『반란과 소란』(1612), 『베이컨 수필집』, 문예출판사, 67, 79쪽.

나아가 내전이나 혁명까지 될 수 있는 정치적 위기로 등장하게 된다. 베이컨에게 폭풍우로 등장하는 기후 변화는 은유가 아니라 서막이 되는 것이다.

1950년대에 17세기 ‘일반 위기’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식되던 잉글랜드혁명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논의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주요 논점은 경제와 사회의 관계(에릭 홉스봄), 국가와 사회의 관계(휴 트레버-로퍼),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존 엘리엇)로 옮겨가면서 ‘일반 위기’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다. 한편 파커가 17세기 중엽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반란과 혁명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는 요소는 기후 변화다. 이후 서양사뿐 아니라 한국사와 동양사 학계에서도 17세기 중엽 기후와 정치적 불안정의 관계를 다루려 할 때, 그 논의는 파커의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파커의 반란모델은 ‘기후 변화 → 기근 → 반란’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 글은 기후 변화와 잉글랜드혁명이라는 정치적 위기의 관계를 이런 도식으로 이해할 경우, 엘리트의 편견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할 우려가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혁명의 원인

잉글랜드혁명은 본질적으로는 왕과 의회의 갈등이다. 이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래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재위 1625~1649)다. 그는 아버지 제임스 1세로부터 혁명의 배경이 되는 세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누이, 정치적 신념, 이질적인 세 왕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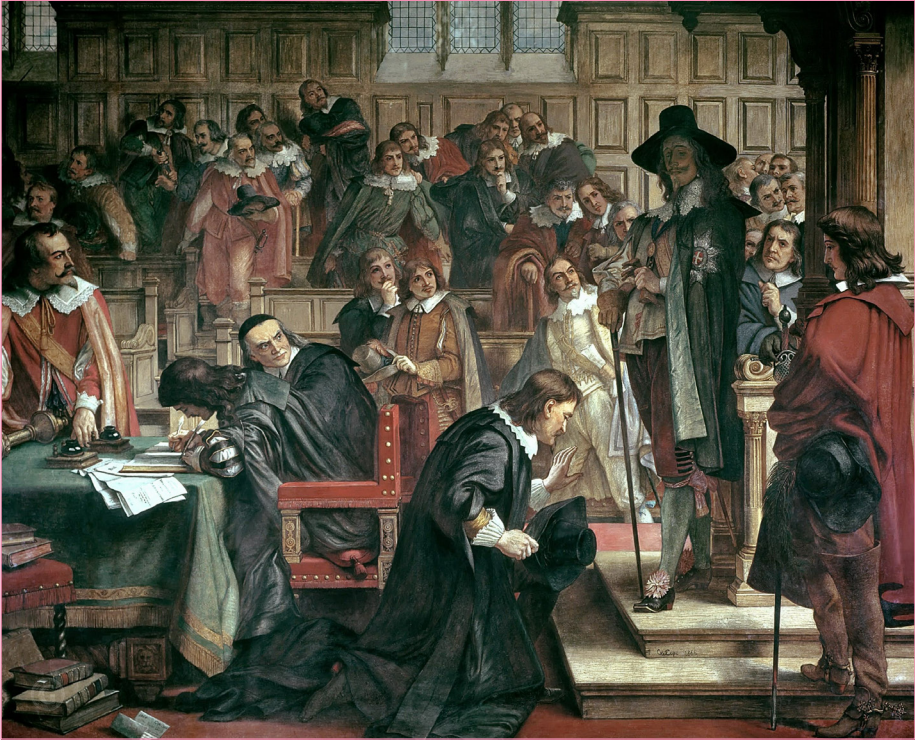
먼저, 찰스의 누나 엘리자베스 스튜어트(Elizabeth Stuart)는 1613년 신성로마제국의 팔츠 선제후³ 프리드리히(Friedrich)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3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는 황제 선출권을 가진 제후로, 30년전쟁기에는 3명의 성직 선제후(마인츠·트리어·뮌헨 대주교)와 4명의 세속 선제후(보헤미아 국왕, 팔츠 선제후, 작센 선제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로 구성되었다.

1619년 프리드리히는 또 다른 선제후령인 보헤미아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종교적으로 탄압받던 보헤미아의 개신교들이 저항하여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의 보헤미아 국왕 직위를 박탈한다고 선언하며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보헤미아의 종교적 갈등으로부터 촉발된 ‘30년전쟁’이 시작되었다. 잉글랜드인들은 30년전쟁을 ‘유럽의 종교전쟁’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강했고, 잉글랜드가 프리드리히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원했다. 하지만 제임스 1세는 (결국 실패했지만) 아들을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공주와 혼인을 시켜서라도 평화를 원했다. 1620년 프리드리히는 보헤미아의 왕과 팔츠의 선제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엘리자베스와 함께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로 도피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왕이 사위와 개신교를 버렸다며 그에 대해 분개했다.

둘째, 찰스는 아버지 제임스처럼 독실한 잉글랜드 국교도이자 왕권신수설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처럼 정치적으로 명민하지 못했다. 찰스 1세는 1625년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고 누나와 매형이 잃어버린 팔츠를 회복하고자 했고, 신성로마제국과 스페인이라는 합스부르크 세력에 맞서는 외교·군사 개입을 모색했다. 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편에 있는 가톨릭 국가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했고, 네덜란드 같은 개신교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재정을 지원했다. 결국 찰스는 부족한 전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매기려 했다. 이에 1628년 잉글랜드 평민원이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나 계엄은 불법이라며 권리청원을 제시하자, 이듬해부터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를 통치하는 ‘개인 통치’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찰스는 잉글랜드와 함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물려받았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별개의 왕국이었지만 모두 찰스가 군주였다. 찰스는 장로교를 믿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잉글랜드의 국교를 강제했다. 국교에서 교권의 정점이 잉글랜드 국왕인 것과 달리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정점은 총회(the General Assembly)였고, 세속 권력과 종교가 교리상 분리되어 있는 장로교에서는 종교적 양심의 이유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1639년 1차 ‘주교전쟁’이 일어났다. 찰스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자금을



찰스 1세가 5명의 평민원(하원) 의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사건 장면(1642.1.4.)

출처: <https://www.parliament.uk>(Charles W. Cope, 1866)

충당하기 위해 오랜 개인통치(1629~1640)를 끝내고 1640년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의회는 군비 지원 요구를 거부했고, 찰스는 의회를 해산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스코틀랜드 군대가 승리하자 두 나라의 평화협상을 잉글랜드 의회가 추인하기 위해 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여기서 스코틀랜드는 종교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스코틀랜드와의 갈등은 아일랜드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1641년 얼스터의 의원 펠림 오닐(Phelim O'Neill)은 스코틀랜드처럼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다. 잉글랜드는 아일랜드반란(1641~1653)을 진압할 군대를 왕과 의회 중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다시 갈등을 겪는다. 이듬

내전은 찰스 1세 개인의 우발적 행동만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잉글랜드의 왕과 의회라는 이중 권력이 헌정적 구조와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

해인 1642년 잉글랜드에서 찰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던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잉글랜드 의회에 침입했다. 의원들은 미리 대피했으나 결국 왕과 의회, 각각을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잉글랜드혁명은 왕과 의회의 갈등이 '30년전쟁'이라는 유럽의 갈등에 이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라는 세 왕국의 갈등과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 찰스가 국교를 스코틀랜드에 강제하지 않았다면, 아일랜드에서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다면, 아일랜드의 군대지휘권을 의회에 넘겼다면, 의회와의 갈등을 좀 더 정치적으로 명민하게 해결하려 했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의회에 침입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내전은 찰스 1세 개인의 우발적 행동만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잉글랜드의 왕과 의회라는 이중 권력이 헌정적 구조와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

혁명과 빈곤

잉글랜드혁명이 시작되기까지 기후 변화가 혁명이 발발하는 데 미친 영향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까지도 여전히 기온 하강이 잉글랜드혁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파커가 제시하는 증거는, 1637년 여름 스코틀랜드에 기상 이변으로 흉작이 일어나고 질병이 퍼졌는데, 바로 이 시점에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종교를 강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반란은 종교적이었지,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을 만한 경제적·

배고프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베이컨과 같은 엘리트의 환상이었다.

사회적 차원의 증거는 최근까지 권위 있는 연구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⁴

반면에, 혁명이 진행 중이던 1647년부터 1650년 사이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수확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흑자는 베이컨과 파커처럼 기후 위기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식량폭동으로,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근대 초 잉글랜드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량난이 반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근대 초 군중은 식량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권력에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통치자가 궁핍한 소비자를 올바르게 통치하고 중간계층이 식량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억제하도록 요구했다. 요컨대, 실제 민중의 반란은 배고픔 그 자체만큼이나 부당함이나 잘못된 통치에 관한 것이었고,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불러내어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이었다. 배고프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베이컨과 같은 엘리트의 환상이었다.⁵

⁴ Geoffrey Parker, 2013,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p. 333. 파커에 대한 반박은 Laura A. M. Stewart, 2016, *Rethinking the Scottish Revolution: Covenanted Scotland, 1637-1651*,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45.

⁵ '군중의 도덕경제'라고 불리는 영향력 있는 논지의 시작점은 E. P. Thompson, 1971,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50, pp. 76-136; William M. Calvert, 2017, "Winter and Discontent in Early Modern England," Sara Miglietti and John Morgan eds., *Governing the Environment in the Early Modern World: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pp. 114-133.

1647~1650년 기후 변화를 동반한 식량위기가 혁명을 낳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잉글랜드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 1646년 가을부터 5년 동안은 안 좋은 날씨로 흉작이 이어졌다. 1648년 여름의 비와 이듬해 봄 가뭄으로 흉작이 들고, 1649년 봄의 서리로 겨울작물이 죽어 그것을 먹어야 하는 가축들이 죽어나갔다. 이러한 경우에 익숙한 대응 방식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정리된 ‘곤궁기 대책(dearth orders)’이었다. 이것은 국왕이 수장으로 있는 추밀원(the Privy Council)이 지방의 치안판사들에게 내리는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을 규제했는데, 치안판사가 매점과 매석을 적발하고 식량 가격을 조절하고, 가난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먼저 살 권리를 보장하며, 곡물이 식량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을 포함했다. 하지만 찰스 1세 시대에는 1637~1638년 높은 물가와 함께 사망자들이 늘어났을 때조차도 잉글랜드에서 ‘곤궁기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⁶

1640년대 하반기의 수확위기 시기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가 나서서 경제적 위기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1646년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의회파에 항복했다. 이듬해 도망을 가서 2차 내전이 시작되었지만 다시 의회파가 승리하고, 다시 붙잡힌 찰스 1세는 1649년 1월 30일에 처형을 당하게 된다. 국왕의 권위는 붕괴됐고 행정부를 통한 중앙의 통제도 부재했다. 1649년 봄이 되면 레스터주(the county of Leicester)의 식량문제에 대응하라는 청원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청원운동이 펼쳐진다. 이러한 청원은 성공적이었는데, 이들은 의회파 체제에 호의를 보였으며, 성실함, 정직함, 수수함과 같은 정파나 계급을 초월한 사회적 가치에 호소하며 빈곤 해결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의회파가 장악한 잉글랜드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의회파가 통치하는 잉글랜드 체제는 새롭고 불안정했으며 좌우파의 위협에 시달렸다. 그런데 다

6 이 문단과 다음 이어지는 문단의 논의는 Steve Hindle, 2008, “Dearth and the English Revolution: The Harvest Crisis of 1647-50,” *Economic History Review* 61, pp. 64-98.

잉글랜드혁명기 민중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버리기보다는 국가를 찾아나섰다.

른 정치적 파벌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겠다며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고, 실제로도 의회파 세력은 그러한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찰스 1세 시기에 시행하지 않았던 ‘곤궁기 대책’은 시행되게 되었다.

잉글랜드혁명기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다. 지역의 치안판사들은 빈곤문제에 머뭇거렸고, 이것을 해결하는 책임은 1340년대부터 국왕이었지만, 1640년대 하반기 혁명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주도권은 민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중의 집단행동이 1640년대 가장 급진적이었던 민중정치집단과 연관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급진적인 정치·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군인, 소규모 상인, 제조업자들이 동조한 수평파(the Levellers)와는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가난한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식량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수평파들은 ‘그들이 무지하고 순진하며 보잘것없는 것에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내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정한 수평파’를 주창하며 수평파로부터 분리한 디거스(the Diggers)는 식량위기 때 즉각적인 해결을 주창한 민중과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디거스가 식량위기 때 민중의 행동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국가를 찾아서

민중이 배고프면 반란을 한다는 베이컨의 생각은 틀렸다. 그것은 민중의 빈곤을 대하는 엘리트의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지배층은 민중이 빈곤으로 반란에 가담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했고, 역설적으로 그러한 편견은 민중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추위가 배고픔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민중이 반란을 한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소빙기가 잉글랜드혁명에 기여했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혁명의 소빙기, 즉 잉글랜드혁명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중과 국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논할 수 있다. 잉글랜드혁명기 민중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버리기보다는 국가를 찾아나섰다. 잉글랜드의 혁명은 1660년 왕정이 다시 들어서며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찾아 나서는 민중의 행동 방식은 그 다음 세기에도 지속되었다.

다른 시선

기후위기와 21세기 국제질서의 재편

첸강(陈刚, Chen Gang)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동아시아연구소(EAI)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

중국의 정치·외교정책·환경·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Political Implications of China’s Technocracy in the Reform Era (Singapore: Springer Nature, 2023)”, “Politics of Renewable Energy in China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19)” 등이 있다.



기후위기는 21세기 국제정치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부상했다.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매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10년 이상 중국은 세간의 관심을 받는 기후공약을 내세워 환경문제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책임감, 정당성, 그리고 준비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한 중국의 이미지는 스스로 구축한 것일 뿐, 이후 정책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이행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미국이 다자 기후거버넌스에서 탈퇴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기후리더십의 부분적 공백은 중국이 기후외교를 통해 국제 규범과 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대했다. 중국의 파리협정 지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극 참여 등 글로벌 환경규범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제도적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변화하는 기후공약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후정치가 국제질서의 재편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 중국의 기후공약

2025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중국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전의 ‘배출 강도 기반 목표(Emission Intensity-based Target)’¹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이러한 전환은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국가별 기여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높여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

1 생산량, 매출액 등 특정 경제활동 단위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국의 기후목표

중국의 기후공약	목표 연도	주요 기후목표
파리협정(2015년 발표)	2030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 에너지 믹스 내 비화석연료 비중 20% 달성 - 산림자원: 2005~2030년 45억m ³ 증대 - 탄소 집약도: 2005~2030년 60~65% 감축
장기 목표(2020년 발표)	2060	- 탄소중립 달성
COP30(2025년 개최)	2035	- 배출량 정점 대비 7~10% 감축 - 비화석연료 비중 30% 이상 달성 -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2020년 대비 6배 이상 확대 - 산림 보유량 240억m ³ 이상으로 증대

별 기후거버넌스에서 자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새로운 목표는 2030년 이전에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오랜 ‘이중 탄소 목표(dual carbon goals, 쌍탄소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의 발전모델, 에너지 구조, 국제적 위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 공약은 2025년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고, 기후체제(climate regime) 내에서 중국이 점차 주요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전에 이루어진 공약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21세기 말까지 예상되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0.2~0.3°C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기존 추세 대비 상당한 개선이지만,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은 이미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하면서 2030년까지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비화석연료 비중을

중국의 목표가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전환된다면,
중국은 석탄 중심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대하며, 2005년 대비 탄소 집약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의 최근 공약은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목표가 기술적·정치적으로 달성 가능한가’이고, 둘째는 ‘기존 추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가속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이다. 만약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과 같이 중국의 목표가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전환된다면, 중국은 석탄 중심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경에 배출량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는 2028년경이고, 배출량은 14.5~15.5GtCO₂e(기가톤 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왜냐하면 국내 석탄 사용량은 여전히 중국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과 전력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석탄 의존 문제는,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전 과제다.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에너지 부문과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변화는 2035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글로벌 기후정책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기후리더십과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기

후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점차 강화했다. 중국의 리더십 전략은 국내 정책 실험과 국제적 참여 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국가 탄소 거래제의 점진적 확대, 선진국과의 선별적 기후협력 등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일부다.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설치국이 되었으며, 2035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발은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 기반 수단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효과는 규제 집행, 탄소 가격 수준, 그리고 뿌리 깊은 석탄업계의 이익에 맞서 싸우려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기후협력을 지정학적 경쟁과 분리된 영역으로 규정하려 노력했다. 한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개발도상지역과의 협력, 특히 일대일로(BRI) 구상을 통한 녹색 투자 협력은 중국의 환경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중국의 목표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배출량 정점 시기가 모호하여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기후 전략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은 2035년 기후목표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으로써, 더 많은 환경적 공약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접근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주도하고” 중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규범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중국의 기후공약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공약은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데,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는 기업들은 탈탄소화 시류 속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외 녹색 기술 분야 고품질 발전을 위한 국내외 표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녹색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

중국은 2035년 기후목표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으로써,
더 많은 환경적 공약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국가표준을 국제규범과 조화시켜 녹색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과 교역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중국은 녹색 발전 전략을 시험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다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사업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와 지역에서 진행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다른 지역에 유용한 시사점과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이들 시범사업의 성공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실험하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효과적인 기후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중국의 기후외교는 점점 더 글로벌 질서의 미래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과 맞물리고 있다. 다자주의와 기후거버넌스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은 국제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의 기후리더십 약화 속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 개혁을 촉구한 시진핑 주석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기후정책은 또한 상당한 경제적·규제적 함의를 지닌다. 강화된 환경기준은 중국의 국내시장을 재편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녹색 금융, 생태도시 개발, 기술 혁신 분야의 이니셔티브는 신흥산업에서 기준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시범사업, 국유기업 개혁, 대중 참여를 통해 기후목표를 보다 광범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내재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 설비 제조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풍력·태양광 설비용량을 총 3,600GW로 늘릴 계획인데, 이는 2020년 수준의 6배가 넘는다. 이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경제 안정에 핵심적인 에너지 안보와 자립성 강화에도 긍정적이다.

또한, 중국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이 시장은 탄소 배출을 기업의 운영 비용 일부로 포함하여, 기업이 효율적인 탄소 감축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새로운 배출 목표는 더 높은 탄소 가격과 이제 막 시작한 탄소 거래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중국-싱가포르 텐진 에코시티와 같은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첨단기술, 시민 참여, 국제 협력을 통합함으로써 에코시티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중국의 역량을 홍보하며, 전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 경제 전환은 녹색 채권, 녹색 신용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 등 녹색 금융 체계가 중요하다. 녹색 금융 기준을 적용하고 녹색 금융 상품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중국은 녹색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혁신은 중국의 기후 목표 달성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핵심 요소다.

탄소 배출 감축 외에도 중국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수많은 생물다양성 핵심지역(hotspot)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 증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장려,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에 대한 중국의 노력은 포괄적인 기후 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유기업(SOEs)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기업은 중국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 기후 목표 달성

에 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유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우선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혁하는 것은 중국의 녹색 전환 가속화에 핵심 사항이다. 이 개혁 과정에 인센티브 구조 조정, 규제 감독 강화, 에너지 부문 내 경쟁 등이 포함된다.

대중의 인식과 사회적 참여는 중국 기후 전략의 핵심 요소다. 중국 정부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기후행동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은 지속가능성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은 대중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기후외교는 양자 협력을 넘어 다자간 포럼과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엔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기후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신뢰 구축, 지식 공유, 기후행동을 위한 자원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국제 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글로벌 기후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녹색 발전 원칙을 통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촉진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며, 협력국들의 저탄소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국의 포괄적 비전과 부합한다.

중국의 국제 기후협력, 특히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의 협력은 이미지 개선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규범 수용과 파리협정 지지가 소프트웨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중국의 기후 관련 투자는 국제적 영향력과 리더십 확보에 필수적이다.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약은 미완성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글로벌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 감축이 더 적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절하다고 평가한다. 이 공약의 효과성은 ‘탄소 배출 정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감축을 측정할 기준선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석탄 의존도는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고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다.

글로벌 기후리더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유동적인 상태다.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주요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상황과 무역 긴장은 국제적 기후 협력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격차, 관료적 저항, 경제적 상충관계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다. 심지어 기후 변화 자체가 중국의 식량안보, 공중보건, 장기적 발전 전망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적응, 교육,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결론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는 환경 정치와 국제질서 변동과 얽혀 있다. 미국이 글로벌 기후행동에서 이탈한 공백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기후 외교를 통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드문 기회를 맞이했다. 목표 수립과 달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중

국이 제시한 기후공약은 글로벌 영향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기후정책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 공약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대로 지구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려는 글로벌 노력에 핵심 요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지구 온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강조해 왔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기후공약 이행 수준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과 21세기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여 기후협력을 강화할 때다.

번역 이주연(동북아역사재단)

체험! 역사현장

비극의 현장에서 화해의 공간으로 조세이탄광을 가다

남상구(南相九, Nam, Sang-gu)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지바대학에서 일본현대사를 전공했다. 일본에서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생산·유통·소비되는지를 연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일 역사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교과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겨울비 속에서 열린 84주기 추도식

2026년 2월 7일, 겨울비가 훑날리는 가운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모임’)이 주최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기 피해자 추도식이 열렸다. 1942년 2월 3일 수몰사고로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이 희생되었다. ‘모임’은 1992년부터 한국인 유족을 초청해 매년 추도식을 이어 왔다. 초기에는 탄광의 배기·배수구인 이른바 ‘피아’가 내려다보이는 해변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2013년 추도비 건립 이후에는 추도광장에서 추도식을 진행해 왔다.

참석자는 그동안 100~200명 수준이었다가, 2024년 9월 갯구 개방 이후 유



2000년 추도식

출처: 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 『フィールドワークハンドブック』



2025년 추도식

출처: 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 유튜브 영상

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에는 약 45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84주기 추도식에는 한국과 일본 유족을 비롯해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한국 방문단 등 약 800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탄광 유골 문제가 처음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정부는 2025년 8월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검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추도식에 파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 정부 간 인식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유골 수습작업 중 발생한 또 하나의 비극

추도식에 맞춰 2월 6일부터 11일까지 타이완·일본·핀란드·인도네시아·태국 국적 잠수사 6명이 유골 수습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6일 유골 1점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추도식 당일, 수습 작업에 참여했던 타이완 국적 잠수사 빅터 웨이 쉬(57)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이번 잠수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는데,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같은 전문 잠수사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조세이탄광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기여하고 싶어 참여했다”(『每日新聞』, 2026. 2. 7., 인터넷판)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적 잠수사 아우디타 할소노가 “단지 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할아버지나 가족일 수도 있다. 존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세계일보』, 2026. 2. 6., 인터넷판)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의 참여는 인도적 연대의 실천이었다.

‘모임’의 대표 이노우에 요코는 8일 기자회견에서 숨진 웨이 쉬 씨의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유골 수습과 반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향후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웨이 쉬 씨의 죽음으로 ‘모임’의 활동이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이 쉬 씨의 명복을 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기억하는 세 개의 핵심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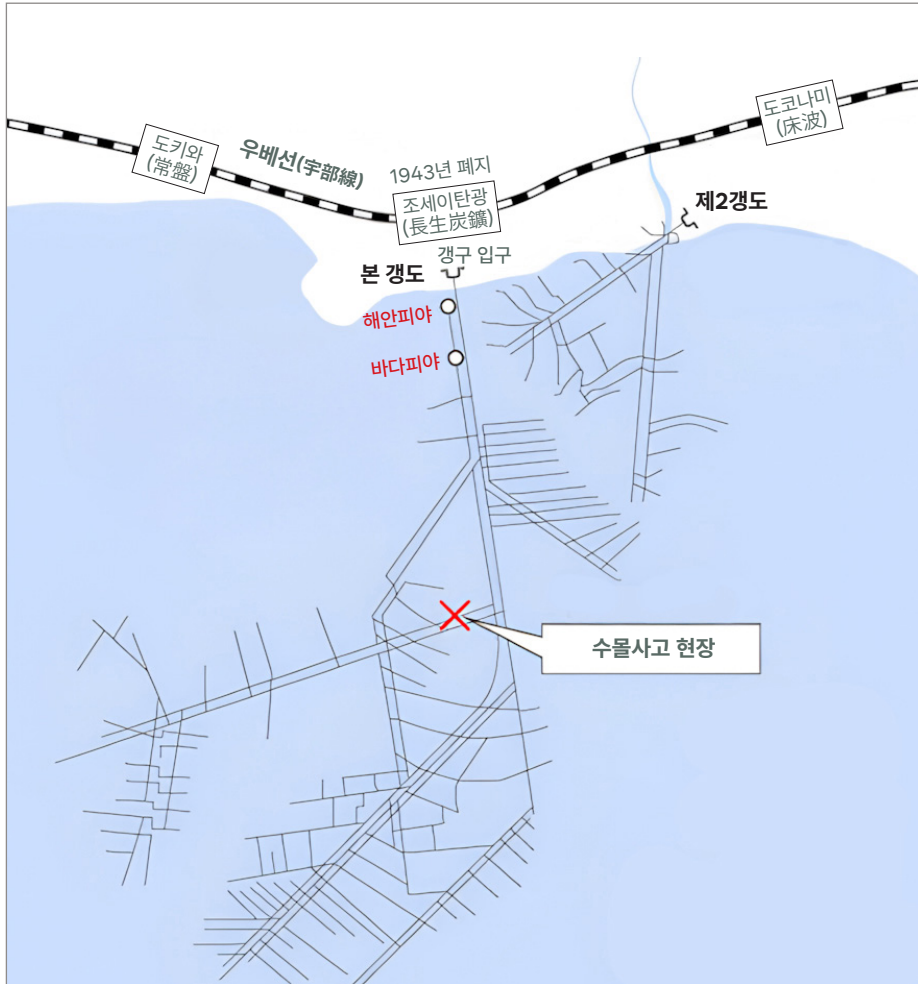
조세이탄광의 추도와 기억 공간은 크게 세 곳으로 나뉜다. 첫째는 바다에 위치한 두 개의 '피야', 둘째는 추도비와 역사 안내 전시가 마련된 추도광장, 셋째는 갯구 입구가 위치한 갯구광장이다. 1991년 '모임' 발족 당시에는 '피야'가 상징적 공간이었으나, 2013년 추도광장 조성, 2025년 갯구광장 조성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적

수몰사고의 상징, 두 개의 ‘피야’

‘피야’는 갯내로 유입되는 물을 외부로 배출하고 공기를 환기하기 위한 통로로, 본 갯도와 연결되어 있다. 높이는 약 28미터이며, 이 가운데 약 4미터가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다. 직경은 약 4.5미터다.



조세이탄광 배치도



‘피야’ 내부 장애물 제거 작업

‘모임’은 설립 당시 추도비 건립, ‘피야’ 보존, 자료·증언 수집 및 편찬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유족에게 ‘피야’는 수몰사고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자, 그 아래 유골이 잠들어 있다는 점에서 묘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1997년 처음으로 유골 발굴 시도가 있었으나 잔해물로 인해 확인에 그쳤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잔해물 제거작업이 진행되었다. 2025~2026년에 이루어진 유골 수습은 모두 ‘피야’를 통해 진행되었다.

시민의 힘으로 조성된 추도광장

추도광장은 ‘모임’이 2013년 시민의 기부로 조성한 공간이다. ‘모임’은 결성 당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과, 왜 아직도 많은 조선인이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지, 그 역사적 경위를 사죄의 의미를 담아 역사에 새기고



시민의 힘으로 조성된 추도광장

자 한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본인이 저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刻む会たより NO.1』, 1991. 6. 17.). 추도광장은 이러한 취지를 공간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추도광장 정면에는 추도비가, 왼편에는 수몰사고 경위와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자료, 한국 유족과의 교류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추도비는 두 개의 ‘피야’를 형상화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왼쪽에는 “강제연행 한국·조선인 희생자”, 오른쪽에는 “일본인 희생자”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져 있다. 일본 내 약 170기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비 가운데 비의 이름에 ‘강제동원’을 명시한 사례는 6기에 불과하다.¹

피해자 명단은 대부분 창씨개명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나, ‘모임’은 본명을 하나하나 추적해 추도비에 새겼다. 현재까지 확인된 136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의 본명이 밝혀졌다. 추도비에 창씨개명된 이름으로 남아 있는 조선인 피해자는 10명으로, 5명의 본명은 추도비 건립 이후에 밝혀졌다.

새롭게 열린 갯구광장

갯구광장은 2024년 9월 25일 갯구를 개방한 이후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다. 토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해 ‘모임’이 별도의 허가 없이 발굴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갯구 개방 이후 이곳에서도 유족이 참석한 추도식이 열렸으며, 갯구를 통한 유골 수습이 시도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갯구 주변에는 갯구를 막고 있던 자재와 내부에서 수습된 잔해물, ‘피야’에서 인양된 물품이 쌓여 있다. 이노우에 대표는 유골 발굴이 종료된 이후 추도비를 이곳으로 이전해 새로운 추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1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편, 2019, 『일본 지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역사의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다』, 동북아역사재단.



새롭게 열린 갯구광장

조세이탄광 추도식이 주는 시사점

2024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 정부 주최 추도식이 2년 연속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조세이탄광 추도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상 규명과 유족 교류를 추진하며 매년 추도식을 이어 왔고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가 참석해 왔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는 외교 현안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관심을 유골 수습과 봉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추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골 봉환과 병행해 수몰사고의 진상 규명 역시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조사는 2007년 발간된 허광무의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

교류가 만든 화해의 가능성

무엇보다도 1992년부터 이어져 온, ‘모임’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활동과 한국 유족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유족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어 왔다. 2024년 12월 15일 방영된 넷폰TV 다큐멘터리 <아버지가 잠든 바다>에서 유족 심재봉 씨는 “일본은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을 보며 미움은 사라지고 고마움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은 이제 비극의 현장을 넘어, 기억과 교류를 통해 화해의 공간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체험! 역사현장

지워진 역사와 사람들 사도광산을 가다

함예재(咸藝在, Ham, Ye-ja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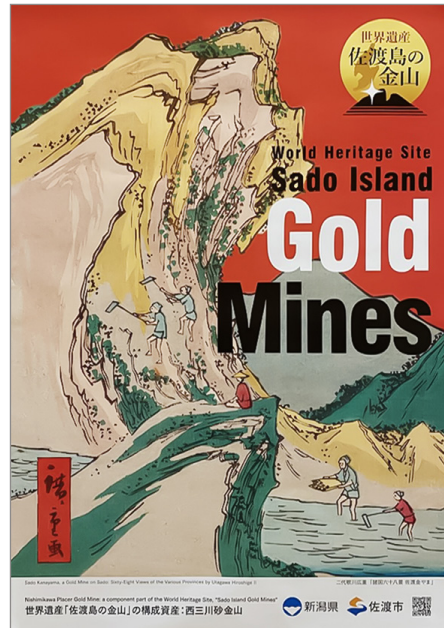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일본근대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시기 일본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체력 문제를 연구해 왔다. 총동원체제에서의 국가-사회-국민의 관계 형성과 변화, 총동원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도광산으로 가는 길: 세계유산의 현재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시(佐渡市)에 위치한 사도광산이 일본의 26번째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도광산은 헤이안시대부터 사금의 산지로 알려졌으며, 1601년부터 금산을 운영하였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직할령으로 지정되어 막부의 재정을 뒷받침했다. 이후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관유화 조치에 따라 1868년에 공부성, 1889년에 궁내성 소유로 변경되었고, 1896년부터는 미쓰비시(三菱)합자회사가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찍부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해 왔는데,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중 일부인 에도시대로 한정하여 등재를 신청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피



‘축 세계문화유산등록 사도섬의 금산’ 포스터(왼쪽)와 사도광산 영문 포스터(오른쪽)

출처: 필자 촬영, 2025. 12. 10

한국에서는 사도광산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의 정식 명칭은 ‘사도섬의 금산’이다.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에서 이곳은 ‘금’과 ‘번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비판하자, 결국 일본은 한국 정부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설치, 광산노동자의 추도식 개최를 약속하였고,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다.

작년 12월, 사도광산 및 관련 전시 시설을 답사하기 위해 사도섬을 방문했다. 니가타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남짓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었다. 들어가는 페리 선에는 사도섬을 홍보하는 각종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었다. 포스터는 사도섬의 자연풍광, 특산물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세계유산 사도금산”이라는 문구였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포스터는 예외없이 ‘금’을 강조하기 위해 금색을 사용했고, 공식마크 또한 금색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도광산(佐渡鑛山)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의 정식 명칭은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 Sado Island Gold Mines)’이다.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에서 이곳은 ‘금’과 ‘번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도광산이 생산한 금은 에도막부의 재정뿐 아니라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도 뒷받침했다. 화려한 금색으로 치장된 사도광산의 모습 뒤에는 강제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을 했던 조선인이 있다. 관광포스터에서 강조하는 ‘금’과 ‘번영’의 이미지는 사도광산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지의 전시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사도광산을 설명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반짝이는 사도광산, 키라리움 사도

사도섬에는 사도시에서 운영하는 대표 가이드 시설인 ‘키라리움 사도(きらりうむ

佐渡)라는 곳이 있다. ‘키라리움’이라는 단어는 반짝거림을 표현하는 일본어 ‘きらり’를 변용시킨 조어로, ‘반짝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사도광산의 상징으로 여기는 금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명칭이다.

키라리움 사도의 전시는 사도광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총 4개의 영상은 사도광산의 역사를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약 400년의 역사로 설명한다. 그 내용은 에도시대 광산의 운영과 채굴 기술을 소개하고, 사도광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금 채취를 위한 대방류(大流し) 기술, 광석에서 금을 분리하고 고품질의 금화를 제작하는 기술, 메이지시대에 서양 기술을 도입하여 1940년에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는 과정 등을 보여준다.

이 전시에서 강조하는 사도광산의 가치는 명확하다. 사도광산은 “고도의 수공업에 의한 채광(採鑛)과 제련기술을 250년 이상에 걸쳐 지속했던, 아시아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며, “수공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관리체제와 노동



키라리움 사도의 금화 전시물
출처: 필자 촬영, 2025. 12. 10

체제를 구축하고, 17세기에는 세계 유수의 금광산으로 고품질의 금을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광산지역, 집락지역의 유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므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역시나 역사의 일부만을 선택한 것일 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사도광산의 실제 현장은 어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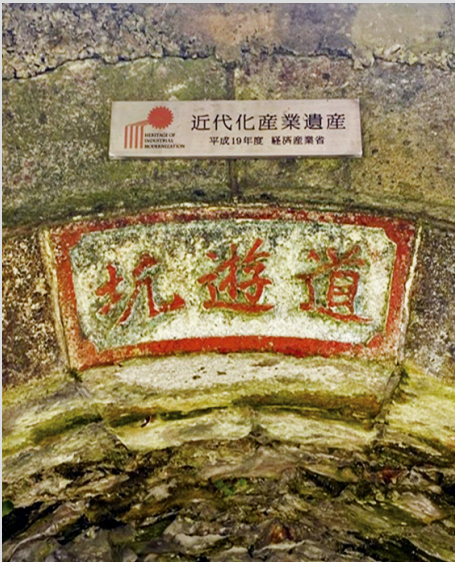
에도시대에 치중된 기억 공간

사도광산은 1989년에 폐광된 이후 관광자원으로 전환되면서 미쓰비시 계열의 골든사도(ゴールデン佐渡)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일반 관광객은 두 갱도와 자료실, 기계공장 등으로 구성된 사도금산 코스를 통해서 사도광산을 둘러볼 수 있다.

첫 번째 소다유갱(宗太夫坑)은 에도시대의 갱도로, 깊숙한 곳까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 갱내의 작업 과정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움직이는 인형을 설치하여 채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소다유갱의 끝은 광산자료실로 이어진다. 이곳에는 광산 채굴에 사용한 도구, 노동자들의 생활, 갱도의 구조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내용은 모두 에도시대에 한정되어 있다.

두 번째 도유갱(道遊坑)은 근대에 만들어진 갱도다. 이곳은 평탄한 길로 이어져 있으며, 광차(トロック)가 다닐 수 있는 궤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소다유갱에서 볼 수 있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도광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근대화 기계 기술이 아니라 에도시대의 수공업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도유갱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계광장(수리소)로 동선이 이어진다. 이곳에는 미쓰비시에서 사용했던 각종 기계 부품과 관련 연표가 있지만, 연표에서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광산의 상징 이미지인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戸: 채굴로 인해 갈라진 산 유적)를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끝으로 사도광산 코스는 마무리된다.

키라리움 사도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의 ‘번영’에 초점을



- 1 소다유갱 출구
- 2 소다유갱 내의 전시 시설
- 3 도유갱 입구
- 4 도유노와리토

출처: 필자 촬영, 2025. 12. 10

키라리움 사도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시기가 에도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지워진 역사와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맞추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시기가 에도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지워진 역사와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카와향토박물관과 조선인 상애료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1938)하여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전쟁이 전면화되면서 물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성인 남성이 징병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부족한 노동력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어 채워졌다. 여러 노동현장 중에서도 특히 광산은 위험한 작업과 각종 사고, 질병이 끊이지 않는 환경이었다. 조선인은 이러한 곳에 강제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도광산도 그런 곳이었다. 사도광산은 군수물자 수입을 위해 금 생산을 강화했고, 1943년부터는 동 채굴로 변경하면서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가 필요했다. 미쓰비시와 지역에서 생산한 자료(『佐渡鉱山史稿本』, 『佐渡相川の歴史』 등)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1939년 2월부터 충남 지역에서 할당모집 방식으로 조선인이 동원되기 시작하여 1945년 일본 패전 때까지 사도광산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은 약 1,519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키라리움 사도, 사도광산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다. 그 흔적을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시 시설을 찾아갔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

여러 노동현장 중에서도 특히 광산은 위험한 작업과
 각종 사고, 질병이 끊이지 않는 환경이었다.
 조선인은 이러한 곳에 강제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도광산도 그런 곳이었다.

시물을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재개관한 아이카와향토박물관(相川郷土博物館)이다. 이곳은 궁내청의 옛 건물이자 미쓰비시광업의 사무소였던 곳으로, 현재 사도광산의 근대 관련 전시를 하고 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1938년에 만들어진 거대한 기타자와부유선광장(北澤浮遊選鑛場)이 자리하고 있어서 박물관이 유독 초라해 보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한 사도광산”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다. 1층에는 미쓰비시가 근대적 기술을 도입한 후 생산량이 증가한 사도광산의 모습을 상세하게 전시하고 있다.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은 건물의 가장 구석진 3층에 올라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



기타자와부유선광장(왼쪽)과
 아이카와향토박물관 D전시실 표지판(오른쪽)

출처: 필자 촬영, 2025. 12. 10

조그만 방에 마련된 D전시실의 제목은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출신지, 생활, 노동환경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도광산에서 생산한 문서 등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에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동원되어 왔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전시실 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강제성을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도 있었다’는 뉘앙스였다.

또 한 가지 위화감을 느낀 것은 설명 방식이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설명이다.

에도시대가 끝난 1868년 이후, 국내외에서 여러 노동자가 와서 사도광산에서 일했다. 전시(戰時) 중, 사도광산의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총수는 약 1,500명이었다고 기록한 문서가 있다.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는 착암(鑿巖), 버팀목 설치, 운반 등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그 어떤 관계나 책임도 없는 제삼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서 느낀 불편함은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기숙사인 상애료 터를 찾아가면서 더욱 짙어졌다. 상애료 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박물관에서 관련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찾아가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갈림길에는 안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길이라 기숙사 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야 간단한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지판은 아이카와향토박물관과 유사한 문투로 제4상애료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조선인 제4상애로 터

출처: 필자 촬영, 2025. 12. 10

쇼와13년(1938) 이후, 사도광산에서는 금의 증산을 위해 새로운 시설의 정비가 추진되어 아
이카와지구 내에 광산노동자를 위한 주택이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 이 기숙사에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가 거주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쇼와18년 5월 말 시점에 124명 재적)이 남
아 있습니다.

관련 유적은 모두 터만 남아 있어서 조선인들의 실제 생활을 짐작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남긴 증언 기록을 살펴보면 가혹한
노동현장인 광산으로 향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열악한 갱내 노동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고, 공탁
금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
도광산의 '전체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사도광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바르게 직시하고,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노력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유네스코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등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시설 설치와 추도식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사도광산의 등재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약속 모두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전시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지만, 그 내용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개최된 추도식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 측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추도식에 그치고 말았다. 현 단계에서 과연 사도광산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성립될 수 있을까?

세계유산 등재는 과거의 유적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보전하여 현재, 미래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적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 사회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미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묻는 장소가 된다. 하지만 현재의 사도광산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편집한 과거에 머물러 있다. 사도광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바르게 직시하고,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노력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체험! 역사현장

차이의 수용과 비교의 조건

타이완의 '식민지' 인식과 현대사

전영욱(全煥旭, Jeon, Young-woo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식민지 조선의 정치사, 법제사를 공부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위상과 법의 역할-법률을 추수하는 제령의 의미」,
「1920~30년대 '조선적 법치'의 성립과 제령의 역할」,
「식민지 조선의 제령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개념,
공포, 추이」 등이 있다.



타이베이를 의식하다: 연구자로서 숨쉬기

타이베이가 서울과 질적으로 다른 도시임을 말하는 듯, 비는 4박 5일 동안 단 1초도 그치지 않았다. 이슬비였다가 작은 빗방울 몇 개로 겹 듯하다가 다시 추적추적 보통의 비로 바뀌는 자연스러운 전환. 기후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이곳은 평소에도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건물 하나하나에는, 마치 사람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듯이 시멘트 지붕이 붙어 있어서 터널 같은 느낌도 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만큼 우산을 쓰지 않는 활동도 자연스러웠다. 때마침 가이드는 타이베이의 건물이 언제나 비에 노출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건축 기술이 우수해서 철거가 별로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한국처럼 한 구역 전체를 허무는 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곁들여진다. 그리고 이 설명은 옛 건물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맥락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식민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타이베이에 한 번 정도는 오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일까? 얼핏 보기에 서울과 다른 외관과 모든 생활 조건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빨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타이베이가 나에게 주는 자연스러움이 그 이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이 이토록 자연스러워서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타이완 출장’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계기와 과정이 그 의미만큼 중요하다. 나는 재단에서 일제침탈사 편찬사업 중 주로 연구총서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의 20년을 통틀어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커다란 규모의 이 사업은, 연구위원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을 꽤 자주 만들어준다. 사업의 취지는 매우 선명하다. 발간사와 편찬사가 공유하는 최종 목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통해 ‘역사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와 연구자가 일로 만나거나 아니면 이토록 선명한 사업을 할 때는 닦아내기 어려운 흐릿함을 마주하는 일이 일반적이어야 한다. 이는 연구위원으로서 이 사업의 취지와 의의를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연구자로서는 완전히 반대의 입

장을 취해야 하는 딜레마 같은 것이다. 나의 노력은 이 딜레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 형태의 노력이어야 연구자로서 숨쉬기가 가능해진다.

어쨌든 내 상황을 이와 같이 진단했으므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했다. 일제의 ‘침탈’을 주제로 더욱 두텁게 대화하기 위해, 또는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를 ‘침탈’이라는 프레임에서 꺼내기 위해 타이완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재단은 이미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나라와 교류를 이어가거나 최소한 시작하고 있었지만, 타이완과의 접촉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아마 여기에는 외교적인 맥락의 이유가 몇 가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학술적인 갈증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2024년에 ‘식민지 조선·타이완의 관료와 경찰’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린청유(林政佑) 교수와 우춘잉(吳俊瑩) 교수를 초청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2호에 실을 기고문을 왕타이성(王泰升) 교수에게 요청한 것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¹ 출장을 준비하기 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2025년 12월의 학술회의에는 왕타이성과 중앙연구원 타이완사연구소 린원카이(林文凱) 박사를 초청했다.

이렇게 단계를 밟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이완 출장을 고려하게 되었다. 연구자로서 숨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시도로서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현장에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욕심을 버려야 했다. 지금의 내 지식으로 짚을 수 있는 포인트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나하나 소거했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장소면 가장 좋다, 타이베이(臺北)-타이중(臺中)-타이난(臺南)-지룽(基隆) 등의 ‘식민도시’ 가운데 어디를 갈까, 어느 도시를 방문하더라도 중간에 아리산(阿里山)임업철도는 타면 좋겠다, 타이완에 가는 것이니 2·28 관련 장소는 빼면 안 되지 않을까, 등등. 아이가 가질 만한 설렘을 다독이며 출장의

1 왕타이성(王泰升), 2025, 「식민의 역사와 현재의 타이완」,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2호.

기본 목표를 우선시하고자 애썼다.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을 국외에 소개하는 첫 자리이니 타이완 연구자와 직접 만날 계획도 세웠다. 타이완사연구소의 진정원(陳延潁)·린원카이 박사와 상의하여 그곳의 연구진과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의 성과와 한계’란 주제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린청유 교수와 상의하여 국립인권박물관을 돌아보기로 했다. 이 두 일정을 고정한 후 나머지 포인트를 잡았다. 그렇게 완성된 코스는 아마(阿嬖, AMA)뮤지엄-국립타이완박물관-타이완사연구소-타이베이총통부-타이베이 2·28국가기념관-국립타이완도서관-린썬공원(林森公園) 내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묘의 도리이-타이베이감옥의 벽-국가인권박물관이다. 2025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이었다.

정체성으로서의 ‘식민성’

내 관심사에 있는 몇 권의 책 속에서 타이베이는 ‘식민도시’로 분석되어 있다. 청의 성시(省市)였던 타이베이가 식민도시 타이호쿠(台北)가 되는 시작으로서 보통 타이베이성(城)의 성곽이 도로로 전환되는 1905년의 타이호쿠지구계획을 가리킨다.² 성곽의 모양과 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도로는 지금의 중정구(中正區) 일대에서 중산남루(中山南路), 아이귀시루(愛國西路), 중화루(中華路), 중샤오시루(忠孝西路)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에 타이완총독부가 세워졌다. 사실 출장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단언컨대 우리는 이 도로를 몇 차례 돌았을 것이다. 근대적 도시계획의 출발로 흔히 언급되는 도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뒷받침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식민성을 느끼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원을 알게 되면 인식도 조금은 달라진다.

출장 당시에는 도로로부터 도출되는 도시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2 이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서로 이연경, 2021, 「타이베이와 서울, 님은 듯 다른 두 도시 이야기」, 『서울역사강좌 12. 세계도시설명서』, 서울역사편찬원을 참고할 수 있다.



아마뮤지엄의 특별전시 '남양군도 이야기(南洋故事)'

출처: 필자 촬영, 2025

어느 시점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나의 관심은 오로지 식민지였다. 본격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한 10월 22일, 첫 방문지로 아마뮤지엄을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AMA)’는 할머니를 친근하게 부르는 타이완어 아마(阿嬤)를 음차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희생자나 증인으로만 보지 않고 ‘평범한 타이완의 할머니’라는 정체성을 담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간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작았다. 당황스럽다는 감각이 솔직할 것이다. 그래서 둘러보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로지 시민 단체의 노력이 빚어낸 곳곳의 흔적은 조사보다 감상의 비중을 더 크게 해주었다. 현안에 대한 학술적 또는 사회적 감각이 갑자기 낮설게 느껴졌다. 이 인상을 길게 풀어 쓸 수는 없다. 다만, 작년 12월의 학술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과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도



린썬공원의 잔디밭 이 잔디밭부터 바로 인접한 강러공원(康樂公園)에 이르는 부지가 옛 공동묘지터로 알려져 있다. 사진의 가운데 보이는 두 도리이 중 큰 도리이가 아카시의 것이다. 원래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 놓여 있다.

출처: 필자 촬영, 2025

해결되었다’라는 뉘앙스의 답변과 연결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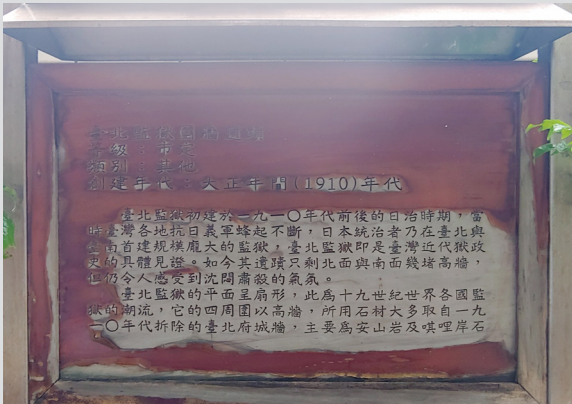
아마뮤지엄의 인상은 식민지를 찾아 나서는 최초의 문제의식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국립타이완박물관이 타이완총독부박물관의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른바 식민지 유산이란 감각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이 박물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2·28평화기념공원 내의 한 시설처럼 느껴진다는 점 등은 식민의 역사를 깨끗하게 체화했다는 인상마저 남게 했다. 입국 첫날 들린 청핀서점(誠品書店) 바로 앞에도 송산문화창작공원(松山文創區)의 부속시설로 개조한 식민지시기(1937년 건립)의 담배공장이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틀림없이 식민지 때 세워졌을 건물들이 계속 나타났다. 식민지 건축을 거의 부순 서울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것을 굳이 부수지 않은 타이베이에서 식민지를 의식할 수 있으리라는 잠깐의 기대는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있었다.

애초에 기획할 때 ‘완벽한’ 식민지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세 곳도 이 인상을 완전히 씻어주지는 않았다. 린썬공원 잔디밭에 나란히 서 있던 두 개의 도리이(鳥居)는 꽤 신선한 볼거리였다. 이 공원 부지는 원래 타이완의 일본인이 묻히는 산

반차오공동묘지(三板橋共同墓地)였다. 도리이는 제7대 타이완총독 아카시 모토지로의 묘역과 그의 비서관 가마타 마사타케(鎌田正威) 묘역에 세워져 있던 것이다. 아카시는 총독 임기 중이던 1919년에 후쿠오카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자신의 유해를 타이완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 도리이의 유래를 접하면서 식민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에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다. 한국에서 아카시는 한국병합을 전후해 헌병대사령관과 경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무단통치를 직접 설계한 인물로 유명하다. 도리이 앞 안내판에는 사법제도의 혁신, 타이완교육령 발표, 르웨탄(日月潭)수력발전사업 확립, 타이완전력주식회사 설립, 중부해안선철도와 동서횡단도로 개설, 공설전당포(公設質舖)제도 실시 같은 아카시의 ‘업적’이 나열되어 있다.

타이베이감옥의 벽은 진항공원(金杭公園)에 붙어 있는 모양새다. 감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면 식민지에 대한 식민자의 폭력적 인식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감옥은 구 타이베이감옥의 수인(囚人)을 동원하여 타이베이성곽의 잔해로 만든 것인데, 이는 제국이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 그 자체다. 그런데 타이베이가 이 감옥을 기억하는 태도는 주변에 있는 안내판이 세 종류에 달하는 것처럼 딱히 일관적이지는 않다. 안내판의 내용과 배치는 그야말로 벽을 향한 인식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공원의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최신 안내판은 감옥의 유래를 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이용자의 휴식과 유희에 대한 요구”를 강조한다. 돌발적인 사고만 있으면 바로 부서질 것 같은 최초의 안내판은 “침울하고 무시무시한 기운”을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벽의 시작 지점에 붙어 있는 안내판에는 타이베이성곽의 잔해를 이용한 방식에 대해 “도시 공간을 재이용하던 특징”이라고 담담히 규정했다. 또 1944~1945년에 걸쳐 갇히거나 처형된 연합군과 미국 공군을 기리기 위한 명판이 더 도드라지는 느낌도 있다. 한국의 서대문형무소가 서대문독립공원 내의 역사관으로 재편되어 독립문 등과 함께 독립과 애국을 상징하는 현상과는 비교가 어렵다.

타이베이총통부 건물을 두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의미의 기대감이 있었다. 나는 서울로 올라온 지방 사람이었고, 조선총독부 청사가 철거되는 1995년에



첫 번째 안내판

타이베이감옥에 대해 “1910년대 대만 각지에서 벌떼처럼 일어난 항일의군(抗日義軍)을 가두기 위해 건설한 매우 큰 감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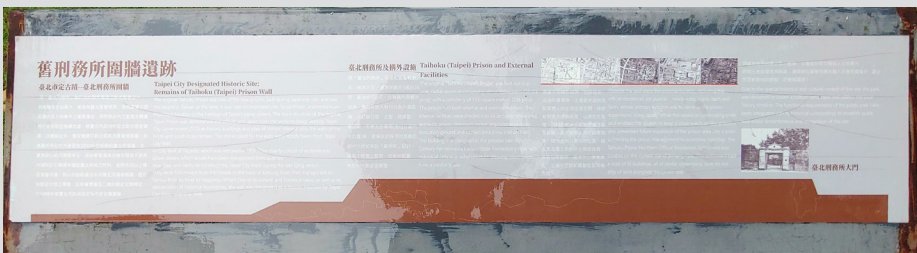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촬영, 2025



벽 시작 지점에 부착된 두 번째 안내판

오른쪽의 안내판은 타이베이감옥에 대해 “항일운동이 끊이지 않아 치안 유지를 위해 건설한 대형 감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일거(日據)란 표현을 쓰는 유일한 안내판이다. 왼쪽의 안내판은 “We will Remember Them!”이란 표어와 함께 처형된 14명 미군 병사의 이름과 계급, 고향을 적시하고 있다.

출처: 필자 촬영, 2025



진항공원에 설치된 세 번째 안내판

진항공원은 2019년에 조성되었는데, “이 부지가 지닌 특수한 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라 공원의 설계는 인문적 경관을 통합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필자 촬영, 2025

중학생이었던데다 역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총독부 청사를 직접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타이완총독부 건물을 총통부 청사로 사용하는 광경은 정말 이색적이었다. 그러나 오전에만 공개되는 총통부 전시실을 꼼꼼히 다 보았을 때 식민지 관련 이야기가 완전히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은 확실히 받았다. 이 건물에서 식민지는 회랑 곳곳에 걸린 건축 기법과 구조 등을 안내하는 설명문에 만 간간이 등장한다. 어차피 80% 이상이 1948년 이후 복원되므로 그마저도 산발적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THE ARK OF DEMOCRACY(민주주의의 방주)”라는 총통부의 정체성이 각인되고, 역대 총통의 사진, 타이완의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문화, 민주주의 역사 등이, 마치 하나의 전시를 보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었다. 여기에 식민지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타이베이에서 본 식민지는 마치 타이베이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과거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식민지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탈식민을 이루고 있다고 할 법한 이 현상에 대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혹시 타이베이 구석구석을 천천히 깊게 봤다면 이와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한국과 타이완이 식민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편견에 가까웠다. 이 생각을 제대로 수용하는 데는 또 다른 경험이 필요했다.

타이완 현대사의 이해: “개가 가니 돼지가 왔다”는 역사 인식

이 도시의 어디에서 식민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자문이 나에게 준 회의감은 생각보다 컸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식민지를 의식해 온 행위는 그 강도와 방향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가동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2000년대 전후부터는 식민지 유산의 극복과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학술적 긴장감도 만들어졌다. 그래서인지 서울에서는 식민지가 계속 ‘발견’되거나 의식되었다. 식민지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려는 최근의 공세에 견디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식민지가 삶에 주는 역설을 마주하는 연습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글과 관련하여 드는 생각은 이 연습과 긴장감이 꽤 내향적이었다

타이베이강조하는 민주주의는 비교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될지 모른다. 이 도시의 정체성을 타이완 전체의 국가성과 일치시키는 게 선부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엄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자긍심을 타이베이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도시 곳곳에 수 놓인 이 의지가 식민지 유산을 압도하고 있다는 인상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닐 것이다.

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식민지 조선과 식민지 타이완을 왜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두 지역의 공유 역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깊이 가져본 적이 없다.

타이베이강조하는 민주주의는 비교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될지 모른다. 이 도시의 정체성을 타이완 전체의 국가성과 일치시키는 게 선부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엄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자긍심을 타이베이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도시 곳곳에 수 놓인 이 의지가 식민지 유산을 압도하고 있다는 인상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닐 것이다. 타이베이성곽의 철거로부터 만들어진 식민도시의 외형은 2·28이라는 국가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틀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국립타이완역사박물관에서는 타이베이감옥 안내판에 대해 “백색테러가 이 장소의 역사라는 점을 여전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평하기도 한다. 여행자로서 식민지라는 과거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이곳의 ‘새로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이 생각이 싹튼 계기는 2·28국가기념관의 견학이었다. 2·28은 타이완의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를 촉발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2·28부터 계엄이 해제되는 1987년까지의 역사를 이 글에서 풀어낼 수는 없다.³ 다만, 이 기념관

3 타이완사 연구자에게 통사(通史)이자 입문서로서 귀팅위 외 지음, 신호정 옮김, 『도해 타이완사』(글항아리, 2021)를 추천받았다. 2·28부터 1987년의 계엄 해체에 이르는 타이완 현대사도 이 책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이 배포하는 짤막한 안내책자인 『2·28 스케치(二二八速寫)』와 상설전시를 통해 2·28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역사적 의의에 다가갈 수는 있다. 만약 누군가가 2·28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요구한다면, 황릉찬(黃榮燦)의 목판화 <공포의 검사(恐佈的檢査)>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 그림은 2·28의 도화선이 된 ‘담배 밀수 단속사건’을 모티프로 한다. 1947년 2월 27일, 타이완성 전매국 단속원은 담배를 판매하던 여성 린장마이(林江邁)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민간인 천원시(陳文溪)까지 죽였다. 시민들은 중산공원(中山公園: 지금의 2·28평화기념공원)에 모여 타이완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했고, 이 사건을 타이완 전역에 알렸다. 국민당 정부의 대응은 계엄이었다. 계엄 아래의 공포정치는 무려 17년 동안 벽 뒤에 숨어 나오지 않은 시루전(施儒珍)처럼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입을 막았다. 기념관 내 ‘희생자의 벽(受難者之牆)’은 이 백색테러에 맞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려는 시도였다.

국가인권박물관은 이번 출장의 백미였다. 원래 1957년부터 군법학교가 자리하고 있다가 1968년에 국민당 군대의 두 사법기관, 국방부 군법국과 타이완경비총사령부 군법처가 이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니까 이곳은 타이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정치범을 재판하고 가두는 장소였다. 나중에 공부해 보니 국민당의 관리 아래에 문화공간으로 정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지만, 지금은 넓고 황량한 수용소의 모습을 거의 가공하지 않은 채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제1법정에서는 메이리다오사건(美麗島事件)의 공판 연출에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국민당 정부가 출구책으로 마련한 재판 공개가 타이완인들에게 준 영향은 스펙터클했다고 한다. 타이완인들은 처음으로 ‘정치범’의 당당한 정치적 의지를 목격했다. 명망이 높아진 민주인사들이 1986년에 민주진보당을 창당하면서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만들었다. 한편, 어둠과 사랑을 뜻하는 ‘런아이러우(仁愛樓)’란 역설적인 이름의 구치소는 이 박물관이 기획한 관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객은 당시 수감자의 동선을 따라 옥사, 독방, 접견실, 도서관, 작업장, 식당 등을 차례로 돌아볼 수 있다. 박물관은 분명히 오늘날의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나라임



메이리다오사건의 재판이 재현된 제1법정의 모습

의자에 신문사가 표시되어 있다. 사건 이후 타이완의 정치적 전개는 ‘아름다운 섬(美麗島)’이라는 별칭에 걸맞는 행보를 보인다.

출처: 필자 촬영, 2025



런아이러우의 식당 전경

연단 위에 마이크와 텔레비전이 있다. 그리고 벽면에 “생활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생활을 증진하는 데 있다 (生活的目的在增進人類全體之生活)”란 문구와 “생명의 의의는 우주를 창조하고 계승해 가는 데 있다 (生命的意義在創造宇宙繼起之生命)”란 문구가 붙어 있다. 식당은 정신 훈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당국의 허가를 받고 텔레비전 시청도 약간 할 수 있었지만, 뉴스 시청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출처: 필자 촬영, 2025

이 차이를 수용하고 비교의 조건을 만드는 일은
 타이완 학계와의 교류에 앞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1945년 직후 사람들 사이에는 “개가 가니 돼지가 왔다”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타이완은 40년 가깝게 식민지에 대해 말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을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 그리고 겨우 두 장소만 보고 타이완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28과 계엄을 기억하는 양상이 국민당과 민주진보당마다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 글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⁴ 이 차이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일본의 점령을 강조하는 ‘일거(日據)’와 일본의 통치를 강조하는 ‘일치(日治)’란 표현에도 타이완 현대사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방문한 중앙연구원은 계엄 시기에 ‘일거’를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저항하며 ‘일치’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 시기를 일제시기, 일제강점기, 식민지시기로 불렀던 한국의 맥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를 타이완은 가지고 있다. 식민지시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백색테러에 저항하는 것과 연결되는 역사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다.

이 차이를 수용하고 비교의 조건을 만드는 일은 타이완 학계와의 교류에 앞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1945년 직후 사람들 사이에는 “개가 가니 돼지가 왔다(狗去豬來)”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사나워도 집을 지켜주는 개를 일본에, 게으르고 먹기만 하는 돼지를 장제스 정권에 비유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장제스 정권이 민심을 얻었다면 이 역사 인식은 어느 시점에 단절

4 예를 들어 국민당의 기획 속에서 계엄 시기는 백색테러로 호명되지 않는다고 한다. 타이베이와 신베이(新北)에 있는 몇 개의 2·28 관련 기념관이나 전시물도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방향이 다르며, 어떤 것들은 조성 과정의 타협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鄧騰克(Kirk A. Denton) 著, 吳煒聲 譯, 2025, 『博物館裡的臺灣史』, 臉譜出版.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2·28은 발발했고, 계엄은 선포되었다. 이로 인해 타이완은 40년 가깝게 식민지에 대해 말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자로서 숨을 쉴 만한 공간 하나를 발견한 셈이다.

지정학적 블록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 국제관계연구소 학술회의

김인희(金仁喜, Kim, In-he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언어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중앙대학교, 중국의 중남민족대학과 산둥대학에서 근무했고, 원난민족박물관과 뉴욕시립대학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는 『소호씨 이야기-산둥 다원커우 동이족의 탐색과 발견』,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유민』, 『치우, 오래된 역사병』, 『중국 애국주의 흥위병, 분노청년』, 『또 하나의 전쟁, 문화전쟁』, *Korea-US-China Trilateral Relations in the Xi Jinping Era, Chinese Patriotic Red Guards-Angry Young Men*이 있다.



왜, 지정학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G7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나 중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중국의 경제 모델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G20에 참가하게 된 것을 세계 무대에 복귀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인식했다. 2010년에는 일본을 대신하여 G2가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추진하던 ‘숨바꼭질’ 외교를 폐기하고, 시진핑 정부가 공세적인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 인식 변화에 대해 프랑스의 전략연구가인 폴 샤론(Paul Charon) 등은 “2017년 이후 중국은 마키아벨리적 순간에 들어섰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공산당은 이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

탈냉전 이후 짧게 이어져 온 미국의 단극적 패권질서는 끝나가고 있다. 현재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말로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같은 강인한 지도자들(strongman leaders)은 구식의 ‘거래 중심 강대국 지정학(transactional great power geopolitics)’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 범위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² 세계화 담론을 대신하여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 전략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1 Paul Chron & Jean-Baptiste Jeangène Vilmer, 2021, “Chinese Influence Operations. A Machiavellian Moment,” *IRSEM(Institute for Strategic Research)*, p.10.

2 Richard Higgott, 2025, “From Globalisation to Geopolitics: The Changing Dynamics of World Order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EU,” *LSE IDEAS*, p.4.

탈냉전 이후 짧게 이어져 온 미국의 단극적 패권질서는 끝나가고 있다.
현재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말로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같은 강인한 지도자들은
구식의 ‘거대 중심 강대국 지정학’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 범위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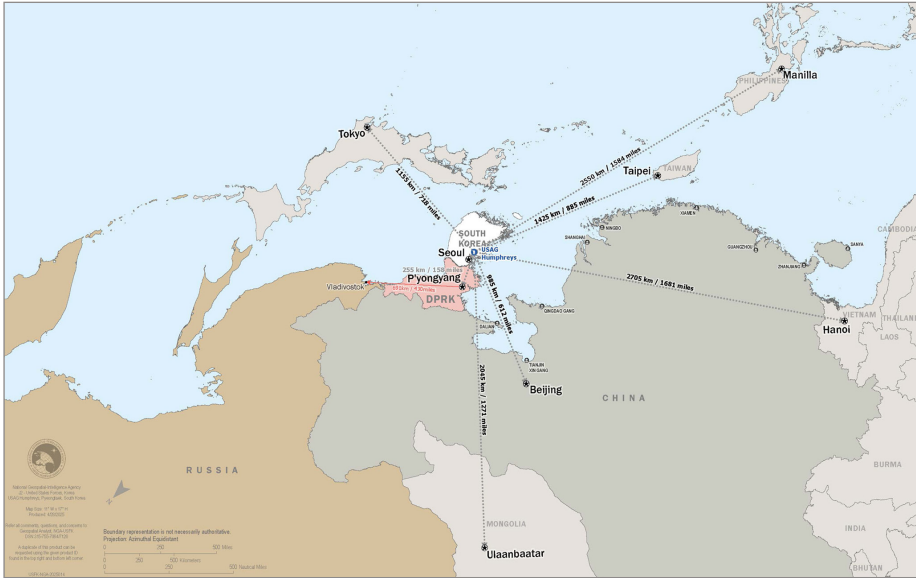
오늘날 새로운 지정학적 분열의 결과는 불확실하나, 확실한 것은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³

냉전시대의 동서 진영보다 덜 구체적이고 이데올로기에 덜 의존적인 새로운 지정학적 극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 범위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 형성되는 블록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서방 진영, 대규모이지만 분열되고 지도부가 없는 유라시아 진영, 특정 헤게모니에 얽매이지 않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스윙 스테이트(global swing states)들의 집합체가 포함된다.⁴

현재의 블록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민주주의 동맹과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권위주의 동맹으로 나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질서가 냉전시기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세력의 충돌로 양극화되며 지정학적 블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갈등이 주로 인도-태평양 공간에 집중되리라 예상되는 점이다. 제이비어

3 Roberto S. Foa, Margot Mollat, Han Isha, Xavier Romero-Vidal, David Evans, & Andrew J. Klassen, 2022, “A World Divided: Russia, China and the West,” Cambridge, *United Kingdom: Centre for the Future of Democracy*, p.28.

4 Zeno Leoni and Sarah Tzinieris, 2024, “The Return of Geopolitical Blocs,” *Survival* Vol. 66, no. 2, p.37.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동아시아 지도

출처: 주한미군 제공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정학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완충 국가(buffer state)’라 불리며 양쪽으로부터의 충돌을 감수해야 했다. 최초의 충돌은 청일전쟁이었으며 이후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결국 한반도는 일본에 의해 병합되었다. 이후 1945년 광복하였으나 식민지 청산 과정에서 분단되었으며 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는 외국군이 출동한 세 번의 전쟁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현재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다.

현재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대국 정치와 블록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정학은 ‘지도 위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충돌하는가를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학은 종종 ‘지구라는 판 위에서 벌어지는
체스 게임’에 비유되기도 한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통시적이자 공시적으로 살펴보고, 한반도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회의가 기획되었다.

아직은 낯선 지정학

지정학(geopolitics)은 영토 위치, 해양 범위,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지리적 요소가 글로벌 정치권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가의 전략적 운명을 지배하는 지리적으로 결정된 법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정학의 연구 대상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지형뿐만 아니라 문화권, 인구 통계, 자원 보유량, 기후 변동 등 인문적·환경적 요인도 포함된다. 1942년 니콜라스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은 “지리적 요소는 가장 영구적이기 때문에 국가 외교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⁵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지정학은 ‘지도 위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충돌하는가를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학은 종종 ‘지구라는 판 위에서 벌어지는 체스 게임’에 비유되기도 한다.

지정학이란 용어는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켈렌(Rudolf Kjellén)이 처음 사용하였다. 19세기 말 유럽 식민지 경쟁 속에서 탄생한 지정학은 그동안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여겨졌는데, 실제로 제국주의시대는 지정학 이론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시기였다. 지정학은 제2차 대전 이후 쇠

5 Nicholas J. Spykman, 1942,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The United States and the Balance of Power First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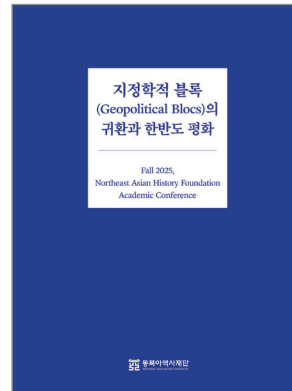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을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묘사한 그림

출처: <https://community.nasscom.in/index.php/communities/digital-transformation/part-1-geopolitical-chessboard-navigating-us-china-ai-rivalry>

퇴의 길을 걸었으며,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함께 귀환하였다. 그동안 한국에서 지정학은 제국주의 학문 혹은 강대국의 확장 전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은 지정학 관련 연구자층이 두텁지 않고, 연구 성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학술회의 준비 과정에서 발표자를 찾기 힘들었고,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지정학 전략에 대해 발표할 연구자를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다행히 뜻을 같이한 연구자들이 있어, 2025년 10월 24일 ‘지정학적 블록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학술회의는 역사 분과와 국제정치 분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역사적 측면에서 통시



학술회의 자료집 표지

제1부 역사: 제국주의 시대 지정학과 한반도

사회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

- 13:30~14:30 최덕규(고려대학교)
근대 한반도 지정학적 상상력의 진화
- 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그리고 글로벌 질서 속으로-
-
- 현명호(동북아역사재단)
한반도 근대 지정학의 발상지 동한만
-
- 심정보(서원대학교)
태평양전쟁기의 일본 지정학 사상과 국민학교 지리교육

14:30~14:40 휴 식

제2부 국제정치: 지정학적 블록의 귀환과 한반도

사회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 14:40~16:00 마상윤(가톨릭대학교)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지정학
-
- 김인희(동북아역사재단)
21세기 그레이트 게임과 중국의 ‘시진핑 문명주의(Xivilizationism)’
-
- 전재성(서울대학교)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대전략 개념과 대중 전략, 한반도
-
- 전봉근(국립외교원)
신지정학 시대를 위한 한국의 대전략 탐색

16:00~16:10 휴 식

종합토론

좌장 김홍규(아주대학교)

- 16:10~18:00 토론자
- 이진일(성균관대학교)
- 이동선(고려대학교)

학술회의 프로그램

적으로 살펴보고,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현재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지정학

역사 분과에서는 제국주의시대(근대~한국전쟁) 한반도 지정학의 특징을 역사학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현명호는 “한국 지정학의 출발점인 동한만은 지명 식민주의에 다자 제국주의가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고 하였다. 최덕규는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지정학은 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그리고 글로벌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당시 지정학적 특징은 현재까지 한반도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통합 제국이 출현한 경우 한반도에 위협이 되었으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정보는 “제국 일본의 지정학은 스웨덴과 독일 지정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교과서의 지정학 관련 내용은 전쟁의 정당성과 국민의 충성심 강화를 위해 활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 지정학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고 인도양 지정학이 핵심이었으며,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정치 분과에서는 역사 분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강대국들의 지정학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상윤은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 국제정치적 긴장과 대립의 핵심지역이 되었으며, 그 결과물인 분단과 한국전쟁은 글로벌 냉전의 모순을 반영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과 냉전은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명적 요인도 있다. 한국은 조선 왕조 이후 외세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뿐 자체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명적 공백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중국은 시진핑 정부 이후 지정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의 지정학은 ‘보이는 공간의 지정학’과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

학'으로 구분되며,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 중 중국 문명주의의 확산은 한중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전재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환경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외교 및 대북정책에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전봉근은 "한국 외교가 신지정학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구한말의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형 대전략과 외교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제, 우리의 지정학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학술회의는 역사학자와 국제정치학자가 공동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 연구한 첫 번째 시도였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이번 학술회의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번 시도가 매우 유의미하며 향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제 연구를 제안하였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에 대한 연구다.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은 지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 권력과 안보를 실제로 좌우하는 공간을 둘러싼 경쟁을 뜻한다. 전통 지정학이 영토, 국경, 바다처럼 눈에 보이는 공간이 중심이었다면, 현대 권력은 데이터, 기술 표준, 네트워크,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서 작동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의 핵심 유형으로는 이데올로기, 사이버 공간, 데이터·정보 공간, 기술 표준의 공간, 공급망 네트워크, 해저 케이블, 우주 기반 인프라가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완충국가의 지정학 전략에 대한 연구다. 완충국가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이는 완충국가가 위협에 처해 있음을 말한다. 현재 우리와 유사한 완충국가들의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셋째,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지정학 연구다. 한국의 역사 속 지정학 환경과

보이지 않는 공간의 핵심 유형으로는 이데올로기, 사이버 공간,
데이터·정보 공간, 기술 표준의 공간, 공급망 네트워크, 해저 케이블,
우주 기반 인프라가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지정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현재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세계 역사에 영향을 준 트리거가 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가 세계 정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명확히 규명하게 될 것이고, 현대 지정학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문명주의에 대한 연구다. 문명은 근대시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었다. ‘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한 문명론으로 인하여 인류는 비문명적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 이후 문명론은 사라졌으나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문명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천하체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문명주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맥락에서 지정학은 더 이상 단순히 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적이고 거래적인 강대국 간 안보경쟁에 초점을 둔 국제정치적 안보관계를 설명하는 은유로 자리잡았다.⁶ 재단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6 Richard Higgott, 2025, “From Globalisation to Geopolitics: The Changing Dynamics of World Order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EU,” *LSE IDEAS*, p.11.

NAHF 톨아보기

첫 발걸음, 그리고 지속될 여정

제1회 한일 중국사 연구자 초청 국제학술회의

위가야(魏加耶, Wee, Ka-ya)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고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백제사와 가야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상호 교류의 관점에서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정치체들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 여기의 한일 중국사 연구를 매개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그보다 앞서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다 준 사다리는 연구자 개인을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편리한 사다리는 게으른 연구자에게는 조건의 미비라는 변명을 허락지 않는 천형(天刑)이었겠지만, 성실한 연구자에게는 학문의 진전을 가능케 하는 은사(恩賜)였을 터, 이러한 조건의 변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중국사 연구는 국경을 넘나든 활발한 검토를 통해 나름의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다리가 양국 연구자들 사이에 소통의 매개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학연 또는 학술회의에서의 조우 등을 통해 생긴 개인적인 인연에 기반한 소통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정례적인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딜까.

2025년 12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한일 중국사 연구자 초청 국제학술회의는 이러한 고민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한일 양국 연구자들이 직접 마주 앉아 연구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한일 학계가 중국사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학술적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내딛은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시대를 아우른 심도 있는 논의

이번 학술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대별 연구 주제를 다루는 총 8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의 시간적 범위는 선진(先秦)시대부터 수당(隋唐)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고중세사’를 포괄했다. 한일 양국의 해당 시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한일 학계가 중국사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학술적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내딛은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기 전공 연구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과정에서의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발표가 진행되었다.

학술회의를 여는 발표는 도쿄대학 고테라 아츠시(小寺敦)의 간독 자료인 칭화간(淸華簡) 『오기(五紀)』 연구였다. 그는 『오기』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정리하고 이 자료가 전국시대 지역 간 활발한 사상·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나 2021년 보고서 출판 이후 중국에서 100편 이상의 논고가 나왔음에도 일본인 연구자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분야가 한적 독해, 역사학, 사상사학, 문학, 고고학, 고문자학 등 다방면의 지식을 요구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구조적 문제를 토로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병준은 최근 간독 연구가 출처 자료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사기』 같은 전래 문헌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칭화간 『계년』과 『사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1차 사료라는 이유만으로 간독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며, 『사기』의 서사 의도를 먼저 이해한 후 양자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사마천의 원칙에 따라 선택된 사실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여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서사물이며, 『계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오카쿠인대학 미즈마 다이스케(水間大輔)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인경결옥(引經決獄: 경서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림)을 분석했다. 그는 이 시기의 인경결옥이 한 대와 거의 동일한 기능과 특징을 가졌으며, 법전이 체계화되었음에도 유가사상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었기에 경서는 법률이 정하는 형벌을 조정하는 기능을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상적 유가 규범과 현실적 통치 필요성의 긴장관계

韓日 中國史 研究의 現段階와 課題 摸索

일시 | 2025.12.05. (금) 09:30 ~ 18:30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일정

개회식		사회: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09:30~09:40	환영사: 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9:40~09:50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제1주제: 선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 이유포(동북아역사재단)
09:50~10:20	제1발표: 전국(戰國)시대 간독(簡牘) 연구의 현황과 과제	小寺敦 (東京大学 教授)
10:20~10:50	제2발표: 청화간(淸華簡) 『계년(繫年)』과 『사기(史記)』	김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10:50~11:20	제1주제 토론: 발표자 상호 토론(각 15분)	
제2주제: 진·한·위진남북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1)		사회: 이규호(동북아역사재단)
11:20~11:50	제3발표: 위진북조(魏晉北朝)에서의 「인경결옥(引經決獄)」	水間大輔 (中央学院大学 教授)
11:50~12:20	제4발표: 간독(簡牘) 자료를 활용한 진대(秦代) 지방통치체제 연구의 현황	오준석 (경북대학교 HK교수)
12:20~12:50	제2주제 토론: 발표자 상호 토론(각 15분)	
12:50~13:50	오찬	
제3주제: 진·한·위진남북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2)		사회: 위가야(동북아역사재단)
13:50~14:20	제5발표: 위진남북조사(魏晉南北朝史) 연구의 변천: 시대구분론에서 글로벌 히스토리의 시좌(視座)로	佐川英治 (東京大学 教授)
14:20~14:50	제6발표: 2000년 이후 한국학계의 위진남북조사(魏晉南北朝史) 연구의 동향	홍승현 (창원대학교 교수)
14:50~15:20	제3주제 토론: 발표자 상호 토론(각 15분)	
15:20~15:30	휴식	
제4주제: 수당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 이장욱(동북아역사재단)
15:30~16:00	제7발표: 당사(唐史) 연구 기본전적(基本典籍)의 현황과 과제	辻正博 (京都大学 教授)
16:00~16:30	제8발표: 한국에서의 최근 수당사(隋唐史) 연구 일반: 『과거제도형성사』를 통해 본 과거(科擧)와 사인(士人) 문제의 현황과 과제	허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16:30~17:00	제4주제 토론: 발표자 상호 토론(각 15분)	
17:00~17:10	휴식	
17:10~18:30	종합토론	사회: 정병준(동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발표자 전원 및 참석자

<한일 중국사 연구의 현대계와 과제 모색> 포스터

속에서 경서가 단순한 사상적 권위가 아니라 법률을 보완·조정하는 실질적 법원(法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오준석은 리야진간(里耶秦簡) 출토 이후 한국 학계가 진(秦) 대 지방통치체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성과를 정리했다. 그는 현정(縣廷)의 조직과 구성, 현리(縣吏)의 충원과 운용, 인적 자원 동원과 운용, 물적 자원 징수와 활용이라는 네 분야로 나누어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간독 자료가 현급 관부의 실제 행정문서로서 단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단면을 종합하여 진 제국 지방통치체계의 전체상을 복원하려는 방법론적 과제를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가지고 들었던 발표는 도쿄대학 사가와 에이지(佐川英治)의 발표였다. 그는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이래 일본 학계가 시대구분 논쟁에 몰두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유럽에서 제기된 ‘Late Antiquity(고대 말기)’ 개념이 동아시아사 연구에 던진 함의를 탐색했다. 3~8세기를 로마의 쇠퇴기가 아니라 고전 문화가 주변 세계 및 기독교와 교류하며 다원적·다문화적 세계로 변모한 시대로 보는 이 관점은, 진·한 제국의 ‘통일’과 수·당 제국의 ‘통합’을 구별하고 4세기를 새로운 중화세계 재편의 획기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본의 연구가 묘지·벽화 등 출토 자료의 적극 활용과 유라시아 광역적 시야를 특징으로 하며, 한인(漢人) 중심의 역사상을 떠나 다원적 중화세계의 재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국사적 틀의 한계를 넘어 위진남북조 시대를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여겨졌다.

창원대학교 홍승현은 2000년 이후 한국 학계 위진남북조사 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연구자가 10명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박한제의 호한체제론과 김한규의 보정체제론이라는 두 작업 가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는 호한체제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북위 황제의 순행이 급속한 한화를 막는 완충장치였으며, 북조의 지방통치가 이원적 구조를 유지했다고 분석한 최진열의 연구, 보정체제론의 사상적 배경

을 탐구하여 두예의 좌전학이 보정체제시대의 산물임을 밝힌 김석우의 연구를 소개하고, 홍승현 자신을 포함해 석각, 문서, 종교, 여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학계의 위진남북조사 연구 동향을 정리했다. 끝으로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십육국춘추집보』 독회라는 공동 연구와 환경사 연구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국 학계가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자의 성과는 2025년부터 재단에서 『패사(霸史)의 세계』라는 책으로 공개되고 있다.

교토대학 쓰지 마사히로(辻正博)는 당대사 연구의 기본 전적인 『당회요』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다. 그는 전승 방식에 따라 전적의 신뢰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당회요』는 판각되지 않고 초사(鈔寫: 베껴 쓰기)가 반복되면서 오자·탈자가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현재 통행본에는 자의적 문자 개변, 문장의 후보와 결락 등 심각한 문제가 다수 존재하므로, 옛 초본(鈔本) 가운데 저본을 선정하여 교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디지털시대에도 사료 교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더 나은 텍스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하원수는 과거제도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형기(수~당 태종), 독자적 발전기(당 고종~당 예종), 확립기(당 현종)라는 세 단계의 형성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거제도의 본질이 거사(擧士: 사인 선발)와 선관(選官: 관직 임명)의 분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주무관의 변화를 황제의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황제와 사인들 간의 줄다리



『패사의 세계: 전조록』(홍승현 역주), 『패사의 세계: 서진록·남량록·북량록』(권민균 역주)

기 결과로 해석했다. 나아가 그는 일본 학계의 당·송변혁기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대구분론의 도식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중국사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실과 기대의 교차

마지막 종합토론은 동국대학교 정병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와 참석자는 한일 학계의 연구 시각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상호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상 깊었던 점은 양국 연구자들이 각자의 학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토론했다는 것이다. 고테라는 일본 학계의 선진사 연구자 감소와 젊은 연구자 양성의 어려움을, 홍승현은 한국에서 위진남북조사 연구자가 10명도 안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토론 장면. 한일 학계의 연구 시각 차이를 확인하고, 상호 보완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문이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일본 학계는 이론적 틀과 광역적 시야에서, 한국 학계는 실증적 연구와 비판적 문제 제기에서 각각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양국 학계 연구의 상호 보완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또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문이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일본 학계는 이론적 틀과 광역적 시야에서, 한국 학계는 실증적 연구와 비판적 문제 제기에서 각각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양국 학계 연구의 상호 보완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향하여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중국사 연구자가 서로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학술적 소통의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술회의 기획자 입장에서는 한일 연구자 간의 심리적·학술적 거리를 좁히고 향후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자부하고 싶다. 다만 비전공자로서 학술회의를 기획하는 데 따른 능력 부족과 함께 나름의 한계를 체감했음을 토로한다. 처음 학술회의를 구상할 때에는 한일 양국 중국사 연구의 최신 현황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각각의 발표에 대해 비판하는 방식이 활발한 논쟁은 물론 서로의 학문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한일 양국 중국사 연구의 오늘을 진단할 수 있는 세부 주제를 정할 수 있었더라면(물론 기획자의 능력 때문이라도 가능할 리 없는 헛된 기대에 불과하지만) 방대한 연구를 정리해야 하는 발표자의 고충을 덜 뿐만 아니라 학술회의의 기획 의도에 좀 더 부합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2026년에 진행될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한일 양국의 중국사 연구가 각자의 학문적 전

출토 자료의 급증,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글로벌 히스토리적 관점의 확산이라는 21세기 중국사 연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 학계가 협력한다면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출토 자료의 급증,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글로벌 히스토리적 관점의 확산이라는 21세기 중국사 연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 학계가 협력한다면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가 한일 학계가 중국사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더 넓은 시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0년, 20년 후에도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만나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국제학술회의가 그 근간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바른 역사 인식 정립 및 공유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 기반 조성”이라는 재단의 “Mission” 뒤에 “Complete”라는 낱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6호 2026 봄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박정애
편집위원 김나영, 배현준, 손장훈, 이주연, 전영욱, 조호연, 함예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팩스 02)2012-6154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
ISSN 2950-9696